

2007년 한국직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국가의 미래, 직업교육에서 찾는다

- ◆ 일시 : 2007년 6월 20일(수) 14:00-18:00
-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 ◆ 주관 : 한국직업교육학회
- ◆ 주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교육학회

학술대회 일정

13:00-14:00 등 록		
사회 이 용 순(한국직업능력개발원 혁신기획조정실장)		
14:00-14:20 개 회 식		
개 회 사 축 사	윤 인 경(한국직업교육학회장) 김 신 일(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 봉 주(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이 군 현(국회의원 한나라당 교육위원) 공 정 택(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14:20-14:50 기 조강연		
직업교육의 희망과 발전 방향	발표: 이 원 덕(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사회 이 정 표(한양여자대학 교수)
14:50-16:20 주 제발표		
초·중·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발표: 정 철 영 (서울대학교 교수)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발표: 김 경 희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평·생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발표: 최 지 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16:20-16:30 휴 식		
사회 이 광 호(공주대학교 교수)		
16:30-17:20 지 정토론		
	토론 : 강 연 흥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정책보좌관) 토론 : 임 정 희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관) 토론 : 이 호 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토론 : 양 한 주 (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 토론 : 김 성 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7:20-17:40 종 합토론		
종합토론 및 정리	좌장: 윤 인 경(한국직업교육학회장)	
17:40-18:00 정 기총회		
	진행: 장 명 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18:00- 폐 회		

축 사

우선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하신 ‘한국직업교육학회’ 윤인경 회장님을 비롯하여 행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행사에 참석해 주신 교육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수님과 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내외 귀빈들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위원
이 군 현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21세기에 초일류국가와 일류기업을 위한 초석과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인재양성입니다. 인재양성 측면에서 특히 직업교육은 단순히 개인에 국한된 차원을 떠나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몇몇 학회나 학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재의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교육기관, 주무부서인 교육부 등 관련 기관들이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직업교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이번 학술대회는 참으로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직업교육의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 전문가들과 교육부 관계자께서 참석하신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해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그 취지에 맞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궫 목 차 궫

기조강연

- 직업교육의 희망과 발전 방향 이 월 덕 / 1

주제발표

- 초중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정 철 영 / 23
-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김 경 회 / 61
- 평생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최 지 희 / 77

지정토론

- 중등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토론 강 연 홍 / 111
- 『중등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임 정 희 / 119
- 대학에서의 직업교육 관련 토론문 이 호 성 / 129
-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 ... 양 한 주 / 137
- 평생학습체제에서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김 성 수 / 147

기 조 강 연

직업교육의 희망과 발전 방향

이 원 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목 차

I. 사람이 희망	5
II.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9
1.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	9
2. 교육 이수자의 취업현황	10
III. 직업교육의 희망과 발전 방향	13
1. 진로=진학이라는 교육 패러다임의 탈피	13
2. 학교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변화	14
3. 일반교육 단계의 변화	16
4. 평생교육에서 직업교육 중심의 추구	17

기 조 강 연

직업교육의 희망과 발전 방향

이 원 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I. 사람이 희망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고도화와 고숙련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21세기를 향한 ‘비전 2030’의 핵심에도 성장과 분배의 동시에 가능한 동반성장의 뉴 패러다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이며,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만 미래의 선진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함을 역설하고 있다.

□ 사람은 국가의 희망이며 기업의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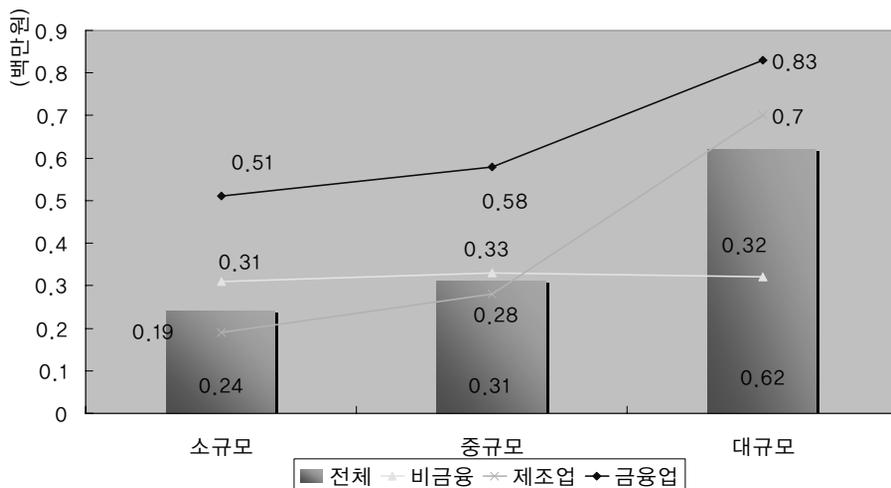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 사람은 국가와 기업의 중요한 희망이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시대에 각국은 국가별로 인적자원개발을 정책의 화두로 내걸고 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사람 즉 인적자원에 있음을 주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인적자원전략의 중요성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국가별로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으며 이중 직업교육의 혁신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기술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현실에서 결국 국가별로 얼마만큼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는가가

국가성장의 기본틀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국가들이 어떠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쓰고 있는가를 벤치마킹 하려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람이 될 것을 모두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최근 유럽의 교육훈련전문연구기관인 CEDEFOP는 유럽 EU 회원국의 전반적 직업교육훈련 개혁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OECD 또한 성인의 직업기초능력을 측정하는 IALS(성인문해력조사)와 ALL(성인직업기초능력조사)에 이어 PIACC(성인직업기초능력패널조사)를 기획하는 등 각국 성인의 직업능력과 직업교육훈련참여율을 국제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하기 위한 사업들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CEDEFOP, OECD) 이 모두가 국가들이 타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비상한 관심을 모우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람이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인적자원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에 투자하는 기업은 성장하고, 사람이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는 기업은 쇠퇴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원의 교육훈련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속속 발표되면서 기업에서도 사람중심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림 1] 기업규모별 1인당 교육훈련비

자료: 인적자본기업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0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토요다의 HRD 담당자에 의하면 토요다의 성공비결은 바로 직장 내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직원교육 투자에 있다고 한다. 이 담당자의 ‘토요다의 진정한 경쟁력은 일반 직원이 지식으로 무장한 것이다’라는 말은 지식기반 시대의 기업에 사람중심경영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말해주는 일례이다.

국내의 경우도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찾아 볼 수 있다. 2004년부터 사람중심경영의 뉴 패러다임으로 이름을 알려진 유한킴벌리의 경우가 그것이다. 유한킴벌리는 1970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생활건강위생용품업체로 시작하여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직장’,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등으로 선정되어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유한킴벌리의 평생학습체제는 단순한 진리에서 시작된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지식근로자로 거듭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학습을 해야 한다. 학습의 최대의 적은 과로이므로 기업에 머무르는 동안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로체계 개선->학습시간 확보->평생학습 실현->지속적 혁신경영->기업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기획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직장 내 평생학습 실시의 열매는 다음과 같이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업경쟁력 향상, 각종 지표의 개선 등으로 직원, 기업, 소비자, 사회 등 모든 구성원들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유한 킴벌리의 “사람중심경영” 사례

- ◆ 예비조 경영으로 직원의 가정친화적인 문화 확산⇒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의 정착
- ◆ 우리나라 출산율 1.07명(세계 최저) ⇒유한킴벌리 직원들의 자녀 수 평균 2명
- ◆ 노사 관계의 개선으로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패러다임 실현
- ◆ 기업경쟁력 향상: 매출액이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성장, 순이익 6배 이상의 증가
- ◆ 각종 지표의 개선: 안전, 생산성, 품질 등 모든 지표들이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 (2007. 노동법률)

한편, 유한김벌리의 평생학습 모델이 의의를 지니는 이유 중 하나는 금융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비해 교육훈련에 투자가 힘든 제조업 분야에서 개척된 모델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제조업 모델에서 시작된 뉴 패러다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사람의 희망은 일자리에서

한편 사람의 희망은 무엇인가? 사람의 희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사람의 희망은 무엇보다 일자리에 있다고 본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없으면 희망이 없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일은 사람에게 있어 단순한 생계와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일은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의 장이다.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교육을 통해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그만큼 의미를 잃게 된다. 사람이 교육을 받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교육을 받는 목적은 자신이 받은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것이라고 본다. 교육 분야에 따라 취업분야와 취업경로가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교육은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개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

과거 한때는 진학이 모든 교육의 중심이었던 때가 있었다. 우수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 3수, 또는 7전 8기 도전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 현실은 달라졌다.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고학력화가 이뤄지면서 이제는 오히려 취업이 진학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취업을 위한 재수와 3수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그간 직업능력개발이 중심이 되지 못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제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은 과거만큼 의미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제는 교육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얼마만큼 일터에서의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가가 교육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II.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교육에서 직업능력개발이 이처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간 과거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직업교육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은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농공상의 유교주의의 가치관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직업교육은 일반교육의 뒷전에 밀려 온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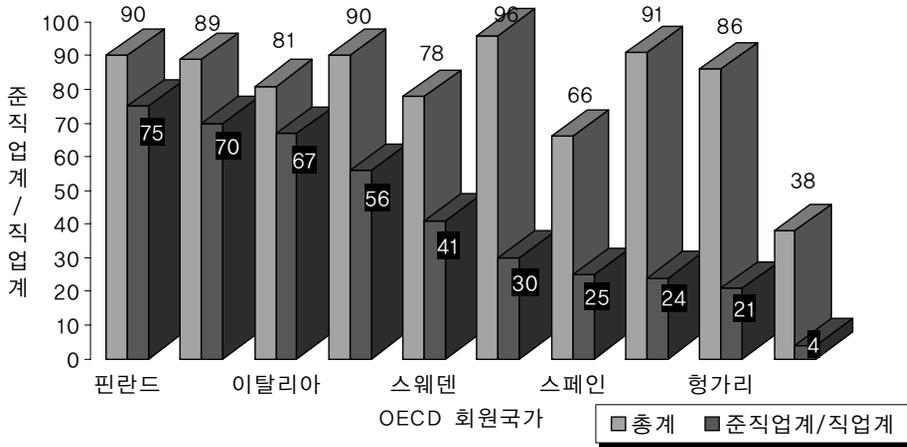
1.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태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높은 교육열 덕분에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경제적 사정이 좋아지면서 높은 교육열로 인해 직업교육 기피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었고 이는 전문계고와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 기피현상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비율과 입학생의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였으며, 중도탈락생의 증가로 인한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 학생들의 질적 수준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90% 이상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에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이상의 최종학력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학부모의 가치관은 결국 자녀의 직업교육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 고교단계 직업교육 참여 실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교단계 직업교육참여율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OECD 선진국들의 경우 최근의 일반교육 이수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은 아직도 고교단계 교육 전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오히려 직업교육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경제발전과 직업교육의 상관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그림 2] OECD국 고교단계교육 총 이수율과 고교단계 직업교육 이수율(2004)

(준직업계/직업계 교육프로그램 순 정렬)

□ 평생학습단계 직업교육 참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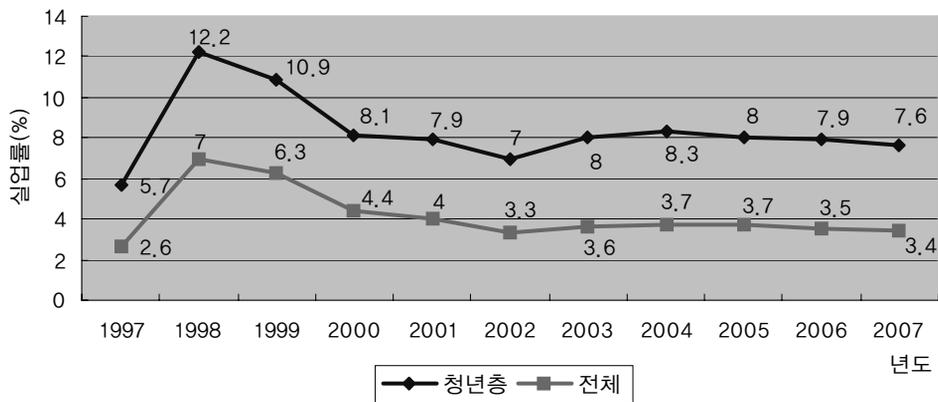
평생학습단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직업교육 참여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04년 기준 25-64세 우리나라 성인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14.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이를 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덴마크 49%, 미국 40%, 영국 40%, 독일 29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OECD 평균 37.1%)

2. 교육 이수자의 취업현황

이같이 직업교육을 기피한 진학중심의 교육의 결과는 어떠한가? 2006년 현재 우리나라 고졸자의 진학률은 전체 82.1%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 중 일반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87.5%이며, 전문계고 졸업자의 경우도 진학률이 68.6%에 달한다. 이제 모두가 대학을 가는 세상이 되었다.

□ 높은 청년층 실업률 및 대졸자 취업난

그러나 이 같은 고학력화가 대졸자의 높은 취업률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등 청년층 인적자원 활용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림 3] 청년층 인구 vs. 전체 실업률 추이

주)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다음에서 살펴볼 대졸자의 취업난 사례를 살펴보면 무분별한 진학과 일반교육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성이 여실히 나타난다. 골프장 캐디 모집에 지원자의 86%가 여성 대졸자인 경우, 환경미화원모집 지원자의 34%가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인 현상 등은 우리나라 대졸자 취업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사례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모집 ⇒ 지원자 355명 가운데 무려 86%(307명)가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국민일보, 2002. 11. 23).

사례 2:

9급 세무직 공무원 661명 공개 채용 ⇒ 과거 고졸(高卒)직으로 인식하던 9급 공채 시험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가 110명 응시(동아일보, 2006. 11. 23).

사례 3:

포항시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수 ⇒ 10명 모집에 481명(남자 478명, 여자 3명) 접수. 지원자들 중 대졸 이상이 9%인 41명(중퇴 9명 포함), 전문대졸은 25%인 123명(중퇴 7명).(세계일보, 2007. 02. 27).

□ 취업자의 낮은 직무 및 학력일치도

한편 진학 위주의 교육의 결과는 취업에 성공한 대졸자의 일과 전공과의 불일치, 일과 학력과의 불일치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난다.

〈표 1〉 대졸취업자의 직업 및 학력과의 불일치도(대졸자) (단위: %)

	전공 관련성		대졸자의 과잉학력		
	관련 있음	관련 없음	과소학력	적정학력	과잉학력
전 체	70.7	29.3	11.1	70.5	18.3
인 문 과 학	52.1	47.9	11	72.3	16.6
경 영 경 제	65.6	34.4	10.5	69.2	20.3
법 률	59	41	12.2	62.4	25.4
사 회 과 학	60.5	39.5	10.7	68.6	20.7
교 육 일 반	74	26	8.4	72.3	19.3
컴퓨터/통신	71.7	28.3	11.3	67.3	21.5
의 료	99.5	0.5	16.8	70	13.2

자료: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교육인적자원부(2005), 장창원 외

이같이 우리나라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의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 경시현상이 빚어낸 노동시장에서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취업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평생의 직업교육이 끝난 것으로 여기는 교육 풍토는 소위 ‘평생직장시대’의 붕괴와 함께 한참 일해야 할 나이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서 헤매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소위 38선이니, 45정이니, 56도니 하는 유행어를 낳게 되었고 이러한 웃지 못 할 현실은 고학력자에게도 어김없이 닥치게 되었다.

이같이 참담한 결과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 주었어야 할 교육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온 것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Ⅲ. 직업교육의 희망과 발전 방향

1. 진로=진학이라는 교육 패러다임의 탈피

이제는 교육의 방향이 바뀔 필요가 있다. 교육의 중심에 직업교육이 서 있어야 한다. 직업과 일이 전제가 되지 않은 교육은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시대에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진로교육이 진학교육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로교육은 곧 취업교육이자 직업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상급학교 진학만이 주요 진로를 구성했다면, 앞으로는 직업으로 가는 경로로서의 교육이 진로교육의 중요한 요소를 담당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개인이 노력하고, 사회가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는 직업교육, 일반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직업교육의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

2. 학교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변화

□ 전문계고 교육의 변화

학교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고교단계는 청년층 이행이 시작되는 경로, 즉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경로가 구분되는 단계로서 각 국가별 직업교육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직업교육 경로가 시작되는 고교단계의 직업교육의 혁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문계고 졸업자의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68.7%로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진학률만으로 볼 경우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구분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문계고는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학력이 취업을 보장하던 시대,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기업들도 학력보다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들이 학력보다 실력을 중시하면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계고 졸업자의 경우 그만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대부분 대학생도 따기 어렵다는 증권투자상담사, 국제무역사, 전자상거래운용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국기능대회 등의 입상 실력을 무기로 ‘고졸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다.

2007년 5월 22일자 문화일보는 이들에 대해 ‘엘리트 고졸들의 반란’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22일 서울여상에 따르면 올해 졸업생의 평균 연봉은 1824만원으로 지난해 1729만원에 비해 95만원(5.5%) 올랐다. 2500만 원 이상 고액 연봉자도 17명에 이른다.

의류전문기업 세아상역에 입사한 차보름(여·20)씨의 경우 연봉은 3000만원에 달한다. 차씨는 이 회사에서는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맡고 있다. 세아상역이 차씨를 고액 연봉에 채용한 이유는 이 학교 출신인 하은혜(여·25)씨의 영향이 컸다. 2003년 입사한 하씨가 대졸사원 못지않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차씨는 “고교 때부터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쌓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취업난을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직장에서도 도태되지 않도록 실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 고졸자의 경우 자동차·중공업·정유 업종을 중심으로 ‘연봉 3000만원’이 이미 일반화돼 있다. 올해 서울공고를 나와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고상명(20)씨는 “지난해 전국기능대회에서 동력배선 분야 은상을 수상한 것이 입사에 큰 도움이 됐다”며 “기능대회 수상자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고액연봉으로 입사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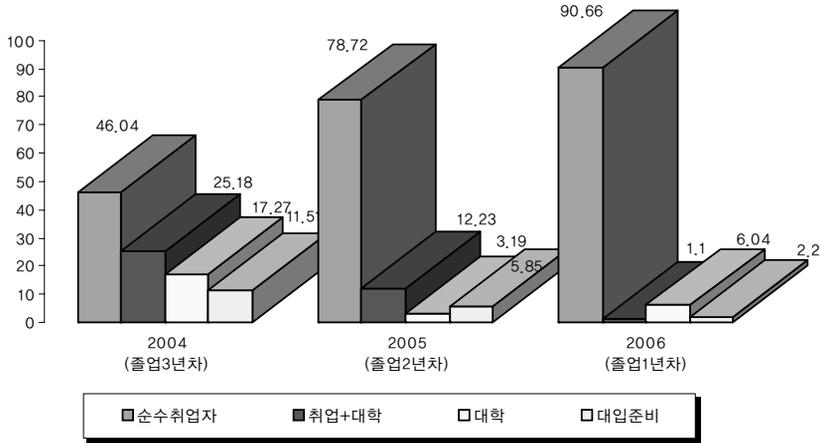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는 대부분 대학에도 진학하는 것이 엘리트 고졸들의 특징이다. 단순히 ‘고졸’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업들도 대부분 고졸 사원들의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5월 22일자, 문화일보)

위의 기사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이지만 단순한 학력이 아니다. 또한 이들 졸업생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졸업 후 진학만이 만사가 아니다. 이들은 우수한 고졸인력의 경우 무조건 대학진학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일단 취업을 하고 직업의 세계를 경험한 후 다시 대학에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는 졸업⇒직업⇒대학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 같은 경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연령대에 대학에 입학하는 ‘대학입학형’ 국가에는 생소한 이야기이지만, 이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평생학습 시대를 맞이한 소위 ‘평생교육형’ 국가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이야기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많이 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경험을 쌓고 30대, 40대에 대학에 돌아와 학업을 계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중심의 대학 우리나라의 진학 중심의 교육풍토는 직업교육 전문기관인 전문계고의 정체성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제 전문계고도 고교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졸업 후 무조건 대학진학이라는 진로에서 벗어나 졸업⇒직업⇒대학으로의 경로의 개척이 필요하다.

진로 현황



[그림 4] 2004-2006년도 S고 졸업자의 취업 및 진학 상태

□ 전문대학 교육의 혁신

한편 전문대학도 혁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 나가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교육의 경시는 전문계고뿐 아니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진학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직업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고등직업교육전문기관인 전문대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크다. 스웨덴, 핀란드 등 직업교육 혁신으로 성공을 거둔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폴리텍과 같이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고교교육 이수율의 증가로 교육의 축이 고교단계에서 고등교육으로 이동하면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문대학의 혁신이 기대된다.

3. 일반교육 단계의 변화

일반교육 내에서도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초중고단계에서 직업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일반대학도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을 이수한 졸업자가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초중고단계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체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초중, 일반계고 교육의 단계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진로교육이 미흡하다. 이들이 초중고를 졸업한 후 곧바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거나 대학으로 진학 후 다시 취업을 선택할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직업교육 요소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일반계고생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에 관한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은 50%에도 채 달하지 못하며 이러한 현상은 초중학교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초중등학교 각 교과에 진로교육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초중고단계 진로교육의 다양성과 적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고단계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는 매년 5월 셋째 주를 「직업세계 체험주간」으로 지정하고 학교별로 산업현장을 체험하는 「1교 1사 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일반대학도 기존의 상아탑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내에 직업교육 요소를 강화하는 등 직업교육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학 중 인턴십이나 현장실습을 통해 일의 세계를 체험한 대학생이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누리사업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배후에도 대학이 지역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앞으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의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포화점이 이르면서 대학이 기존의 전통적인 적령이 연령층의 학생에 충원을 의존하는데 있어서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제는 비전통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문호를 제도적으로 개방하는 동시에 이들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평생교육에서 직업교육 중심의 추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저조하며 특히 평생

학습 참여자 중 직업과 관련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중이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평생학습 따로 직업교육 따로 라는 의식에 젖어 있어 이에 대한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직업교육은 평생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외국의 경우 평생학습을 의미하는 ‘성인학습(adult education)’,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이라는 용어에는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 학교교육 내에서 교육과 훈련의 통합이 이뤄져 있을 뿐 아니라, 평생교육 제도 내에는 ‘교육’과 ‘훈련’이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러한 능력개발 중심의 관점이 하루 빨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에도 정착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평생직업능력개발시대의 시대에는 재직근로자, 여성, 중고령자 등 주요 집단들의 능력개발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능력의 향상은 곧바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짐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일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이 그리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 중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73.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2.2%, ‘실효성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26.2%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이들 근로자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암울한 결과라 하겠다.

이 밖에도 여성, 중고령층 등은 향후 경제적인 중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능력개발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들에 대한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족해져가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인력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에서 직업교육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요소들도 많다. 이 중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이 근로자의 학습의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기업이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교육훈련참여는 확대 될 것이다. 만약 기업이 이에서 더 나아가서 근로자의 교육훈련참여를 권장하는 역할

을 한다면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는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선행학습의 인정이나 자격의 인정 등 학습경험을 기업에서 또는 학교 제도 내에서 인정해주는 평생학습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학습의 장소가 학교든, 기업 현장이든, 학원이든, 자신의 공간이든 관계없이 축적한 학습을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직업교육은 평생학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적자원이 중심이 된 무한경쟁의 시대에 직업교육이 중요한 요소임은 이제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은 과거의 가치관과의 갈등 등으로 직업교육의 부흥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결국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직업능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는 다가오는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최근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기존의 교육은 개선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사람이 희망인 시대이다. 그리고 사람의 희망은 일자리에서 오며 일자리는 바로 직업능력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6).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07-'11) 계획.
- 노동법률(2007). 유한킴벌리 인적자원개발사례, 2007년 1월.
- 노동부(2007).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07-'11).
- 문화일보(2007). “엘리트 고졸들의 반란”. 2007년 5월 22일자 보도.
- 이기성 외(1999). 평생학습 기회확대를 위한 유급·무급 휴가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부 민간 합동작업단(2006).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2006년 8월.
- 정지선 외(2002).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태화 외(2004). 직업능력개발 중심으로의 평생교육제도 개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지희(2007). “학교와 직업으로의 경로의 대전환”, 이제는 진로교육이다. 직업세계 체험주간 기념 세미나(2007. 5.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지희, 장명희(2006).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정책자료(미발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OECD(2000),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Making Transitions Work,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 OECD(2006),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주 제 발 표

- 초·중·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 정 철 영 (서울대학교 교수)
-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 김 경 희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 평·생·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 최 지 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주 제 발 표

초중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정 철 영

서울대학교 교수

주 제 발 표

중등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정 철 영
서울대학교 교수

I. 서 론

-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라 세계가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지각변동이라고 할 만큼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이러한 주변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전문계 고등학교는 많은 도전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다각적인 정책과 방안들이 수립·추진되어 왔다.
- **중앙정부 차원:**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국민정부의 새교육공동체,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는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직업교육에 관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만 보더라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직업교육관련 개혁 및 개편방안 (1996. 2),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1999. 3), 교육부·노동부의 21세기 직업훈련의 발전 전략 (1999. 12),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 (2000. 1),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인적자원개발 전략 (2000. 4),

교육인적자원정책 추진계획 (2001. 3),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2005. 5. 12), 교육인적자원부의 산업별 핵심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부처위탁·지원 운영을 위한 특성화 전문 고등학교 육성계획 방안(2006.12), 교육인적자원부의 희망실현 실업계고 육성전략 (2007. 2)등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관한 대책들이 제시되었다.

- **시·도교육청 차원:** 서울특별시교육청(2000), 인천광역시교육청(2000), 충청남도교육청(2001), 부산광역시교육청(2005), 충청북도교육청(2005), 경기도교육청(2005), 제주도교육청(2006), 강원도교육청(2006), 경상남도교육청(2006), 대구광역시교육청(2007), 충청남도교육청(2007) 등과 같이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국책연구소 및 기타:** 1996년까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직업교육에 관한 대책들이 제시되다가, 1997년부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원되고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전담하다시피 해왔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종합발전계획과 시행방안들을 수차례에 걸쳐 제시하였으며 2000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종합대책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문계 고등학교 발전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이 밖에도 관련 학회 및 협회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양한 연구와 방안제시가 있어 왔다.

□ 최근 들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부처에서도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다양한 과제와 세부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5월 17일에는 **재정경제부**에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을 발표하면서 7가지 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전문계고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노동부**에서는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2007~2011)”에서 실업계 고교 취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전문계 고등학교로의 명칭 변경, 명품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 정부부처 위탁운영,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활성화 등이다.

□ 많은 중앙 부처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육성 및 지원의 의지가 높은 이때에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제에 대하여

학회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시의 절절하고 그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다음과 같은 5가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 및 목적
- (2) 전문계 고등학교의 체제 및 운영
- (3) 전문계 고등학교의 규모
- (4) 전문계 고등학교의 인적자원
- (5) 전문계 고등학교 관련 조직체계 및 예산

II.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 및 목적

-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으로 되어 있으며, 초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1항에 따르면 전문계 고등학교는 “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다.
-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전문계 고등학교가 종국교육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에서는 취업은 물론 진학을 통한 계속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과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즉, “취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동일계열의 진학으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두 의견 모두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하다(<표 1> 참조).

〈표 1〉 전문계 고등학교 성격 규정과 관련된 논의사항 비교

구분	진학 위주	취업 위주
근거 논리	① <u>직업기술수준의 변화</u> 로 인하여 전문계 고교 수준의 숙련공수요는 줄어들고 <u>중등 후 (post- secondary) 단계에서 양성되는 기술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u> ② <u>높은 교육열</u> 로 인하여 <u>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 대한 요구가 증가</u> 하고 있다. ③ <u>대학입학제도의 구조적인 변화</u> 로 <u>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기회</u> 가 <u>구조적으로 증가</u> 하고 있다. ④ <u>교육정책 및 지방화</u> 로 인하여 <u>진학이 강조</u> 될 가능성이 높다. ⑤ <u>개인의 지위향상</u> 을 위하여 <u>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u> 해야 한다.	① <u>전문계 고교 졸업 수준의 인력</u> 이 <u>계전히 요구</u>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② 현재 전문계 고교에서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되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미흡하므로, 이를 위해 <u>취업에 강조</u> 를 두고 <u>산업현장의 요구를 더욱더 반영</u> 해야 한다. ③ <u>하향취업과 같이 과잉 학력</u> 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④ 단순한 진학 위주는 <u>상급학교로의 학력경쟁</u> 을 야기하며 질적인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 ⑤ <u>개인차를 고려</u> 하여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계 고교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기술수준이 높아져 진학이 요구된다는 것은 직업기술 수준과 학교교육 수준이 일치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 진학위주로 하면 전문계 고교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고학력 욕구가 강한 우리 현실에서 과잉학력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계 고교 교육을 취업 위주의 중국교육으로 간주하는 것은 교육을 경제발전의 수단을 보는 견해이다. • 기술과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교육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자료 : 정철영(1997).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 규정. **직업교육연구**, 16(2), pp. 35-50을 요약하였음.

□ 최근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현황을 보면, 1970년 이후 1990년까지 계속 증가하던 취업률은 1990년대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진학률은 급속히 상승하였고, 2002년부터는 진학률(49.8%)이 취업률(45.1%)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6년도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68.6%는 진학하는 반면, 취업자는 25.9%에 불과한 실정이다.

□ 내신비중 강화 및 동일계 특별전형 등의 대입정책, 고등교육기관의 양적팽창으로 인한 대학입학 용이한 구조적인 측면, 자녀수의 감소와 교육지원을 위한 가

구당 경제력의 증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강한 욕구 등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고, 최근 전문계 고등학교의 동일계 대학 정원의 비율이 2007년에 기존의 3%에서 5%로 늘어나고,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앞으로 감소하리라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별다른 조치와 노력 그리고 변화가 없는 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 비율의 증가는 지속되리라 예측되고 있다.

- 이러한 구조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외면하고, 단지 전문계 고등학교를 취업 위주의 종국교육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내신비중 강화 및 동일계 특별전형 등 대입정책으로 인해 실업계고 졸업자를 취업이 아닌 대학진학으로 유도하고 있어서 ‘실업교육의 충실화’라는 실업고의 교육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김영철, 2007: 7)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직업교육의 목적은 3가지로 첫째, 인력수요의 요구에 대처하는 것(meeting society's needs for workers); 둘째, 각 학생에게 가능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increasing the options available to each student); 셋째, 모든 유형의 학습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serving as a motivating force to enhance all types of learning)으로 (Evans & Herr, 1978),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취업과 진학 모두가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된다.
- 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취업과 진학을 어중간하게 혼재하여 실시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는 점이다. 즉, 전문계 고등학교는 해당 전문영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의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취업이 가능한 전문영역(예를 들면, 배관, 용접 등의 기능분야 등)에서는 취업위주의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졸업후 좀 더 심화된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경쟁력을 갖춘 취업이 가능한 분야(예를 들면, IT, 디자인 등)에서는 동일계로의 진학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전공분야에 따라 취업과 진학의 강조점이 달라야 하며 취업의 경우에도 계속교육기회는 열려있어야 하고, 진학의 경우에도 취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적으로는 무분별한 대학진학 (미국의 대학진학율은 1990년 59.9%, 2001년 61.7%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2006년 82.1%로 급증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과 이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과잉학력 및 하향취업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가적으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앞으로 국민생산성에 있어서 입직을 빠르게 해야 하는데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입직 연령이 2년 낮은 점, 그리고 이러한 낮은 입직은 결혼 연령을 늦게 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김용익, 2007).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사업), 학습-일 연계를 통한 능력개발 기회 확대, 취업협약에 따른 인력양성, 취업시 군복무 해결 등을 통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직후 취업에 강조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옳다고 본다.
- 다만 문제는 학생 및 학부모의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 욕구를 어떻게 취업으로 전환하거나 적어도 취업과 동시에 진학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졸업 후, 취업 및 학사 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경로 구축, 전문계고-직장-대학을 연계하는 순환적 교육체제 구축, 전문계고를 졸업한 후 산업체의 취업과 동시에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형태에 대한 지원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등), 사내대학 활성화 및 호환성 제고, 기업내 직무연수 및 교육 훈련에 대한 학점은행제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개별학교 단위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에 따라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여상의 2006년도 신입생의 경우 입학시에 10학급 중 취업을 희망하는 학급은 4학급, 진학을 희망하는 학급은 6학급이었으나 2007학년도에 2학년으로 진급한 결과 학생의 희망에 따라 취업 7학급, 진학 3학급으로 재편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학교에서 진로지도와 선택을 돕기 위하여 학부모를 초청하여 기업체명, 연봉현황, 졸업생의 성공사례 등 취업 현황에 대해 소개함과 동시에 졸업생 중 취업 성공사례를 직접 재학생에게 특강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욕구를 자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서울여상 전체 졸업생의 70%이상이 졸업

과 함께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학교 입학생의 대부분이 내신 상위 30% 이내의 상위권자임을 고려할 때 학교의 노력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률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최지희, 2007).

Ⅲ. 전문계 고등학교의 체제 및 운영

1. 체 제

- 특성화 고등학교는 문민정부 시기의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1996년 2월에 제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중에서 고등학교를 다양화·특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처음으로 제안되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행과 같이 획일화된 대규모 고등학교 형태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다양하고 특성화된 소규모의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입시 위주·주지교과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 관심과 흥미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교육 선택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98년 3월 최초의 특성화고등학교인 부산디자인고등학교가 개교된 이래 1999년 3월에는 부산디자인고등학교와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등 2개교가 특성화고등학교 자율운영학교 지정된 이래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104개의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통합형 고등학교**는 2004년 현재 전국에 10개교가 통합형 고등학교 시범 운영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시범 운영이 완료되었으며, 병천고등학교와 양평고등학교의 성공사례에 힘입어 2005년 5월 12일에 발표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방안에 따르면 현행의 종합고등학교를 통합형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

다. 그런데 통합형 고등학교 전환이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징검다리가 되지 않고 일반계열, 전문계열 모두의 장점이 학생들에게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체제를 진학과 취업을 양 축으로 하는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과학고등학교, 통합형 고등학교, 일반 전문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로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중에서, **산업과학고등학교**는 농과대학, 공과대학 등 진학분야를 미리 결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제 동일계 대학으로의 진학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농업과학, 공업과학 등 해당 기초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실험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산업과학고등학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하에 너무 양적으로 과도하지 않도록 전국에 권역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1~3개교를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산업과학고등학교는 기존의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진학 분야를 미리 결정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정한 전문계 고등학교 규모 내에서 이러한 4가지 전문계 고등학교 형태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제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체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장기적으로는 통합형 종합학교 또는 통합고로 가야 한다는 방안이 일반교육분야 전문가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데(김영철, 2007; 윤종혁, 2007), 이러한 학제 개편에 관하여 직업교육 전문가들의 방안 마련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2. 운영지원

-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사업), 정부부처에 의한 특

성화 전문계 고교 육성사업,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 지원사업, 농고 현장 체험교육 지원사업,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사업,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학교기업 지원사업, 전문계 고교 취업지원 기능 확충사업, 첨단학과 개편 등 9개 각각에 대하여 기본개념과 지원현황으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고, 이를 표로 요약 정리한 것은 <표 2>와 같다.

가.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사업)

- **【기본개념】** “전문계고-전문대-산업체-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계고와 전문대학은 산업체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는 이렇게 양성된 인력에 대해 취업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참여기관(특히 산업체, 전문대학, 전문계고)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계고 및 전문대학 교원들을 산업체에서 현장연수를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산업체 인사를 산학겸임교사로 활용하는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 **【지원현황】** 2006년 현재 44개의 사업단 (제1모형<취업-진학 병렬형>은 18개, 제2모형<진학-취업 순차형>은 26개)에 40개교의 전문대학교, 150개교의 전문계 고등학교, 326개의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99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10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지원하며, 2009년부터는 현행사업(2006-2008)을 평가 및 분석하여 60개 사업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c).

나.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 사업

- **【기본개념】** 소관 중앙부처가 산업별 핵심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육성산업 및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직접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및 육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관계부처가 직접 국가차원에서 책무성(취업/진로)을 갖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거나 산업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2006년 3월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 특위에서 정부부처 및 산업체 위탁 운영방안이 마련되었고, 2006년 8월 29일 정부부처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었다.

- **【지원현황】** 위탁지원 방법은 일괄위탁운영(1모형), 공동운영(2모형), 프로그램 지원(3모형) 등 3개 유형으로 하며, 2007년도 선정대상 산업계 고등학교 학교수는 104개교이며, 예산지원 부처는 6부 2청으로, 농림부(2모형 9개교), 해양수산부(2모형 3개교, 3모형 6개교), 산업자원부(1모형 1개교, 3모형 35개교), 정보통신부(3모형 2개교), 문화관광부(3모형 5개교), 국방부(3모형 10개교), 중소기업청(1모형 1개교, 3모형 29개교), 특허청(3모형 3개교)이다. 2006년도 실적을 보면 85개교에 135억을 지원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생산인력양성(농림부 10개교, 15억), 산학협력 우수고(산업자원부 35개교 70억),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사업(중기청 40개교, 50억)이다.

다.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교 지원사업

- **【기본개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연고산업 등과 관련하여 특성화 고교로 전환을 유도하고 해당분야 산업체와 인력양성 및 취업에 관한 협약 체결을 통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시한 기준(취업률, 학교종합발전계획, 교원현장연수 정도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평가를 통해 선정·지원한다.
- **【지원현황】** 2006년 기준으로 지원규모는 총 175억원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시·도교육청별로 1개교씩 특교로 지정한 학교당 7억원씩 총 112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모에 의해 선정한 전문계고 31개교에 학교별로 2억원 내외씩 총 6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라. 농고 현장체험교육 지원사업

- **【기본개념】** 농림부는 2006년부터 미래 농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예비 농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농업응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농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교육 과정을 신설·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지원현황】** 2006년 현재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9천만원씩 총 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는 현장체험교육 이외에 한국농업교육협회를 통하여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마.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사업

- **【기본개념】**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노동부, 2005)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하여 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특히 2010년까지 1만 여명의 차세대 성장동력 현장생산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중간기술인력 양성,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school to work) 활성화,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추세의 다원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 **【지원현황】** 외부 교육전문기관과 협약에 의한 위탁교육 실시 및 외부 교육전문기관의 학습을 학교수업으로 인정, 기업체 CEO,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강사 초빙, 실업고생 대상 계절학기 수업비, 산학협력 동아리 활동비 등의 지원, 산학협력확산사업 참여대학과 연계하여 참여 교원의 기술재교육 연수 실시, 실업고 재학생들의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데 2005년 20개 학교, 2006년 15개 학교를 선정하여 총 35개 학교에 학교당 연간 2억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2005년에는 40억원 (1개교당 2억원 내외), 2006년에는 70억원 (기존 40억원 + 신규 30억원)의 규모이다.

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 **【기본개념】** 중소기업청, 병무청,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에 있는 ‘관련 부처 협약에 의한 명문특성화 고등학교 확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공고는 기업과 협력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지정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정된 공고는 자율학교 및 연구학교로 지정되며, 공고생은 재학 중(3학년) 프로그램에 의한 훈련을 받고 졸업 후 2년간 해당기업에 협약에 따라 취업한다.
- **【지원현황】** 현재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총 50개교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시범학교로 17개교, 2006년도에 시·도 교육청 지정 시범학교로 23개교, 2007년에 신규로 13개교가 선정되었다. 한편, 일정기간 지원 후 학교자율의 산학연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존 참여학교의 선정을 우대하되, 2006년 실적이 일정수준 이하인 학교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신규 신청학교의 경우에도 2007년 사업계획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교는 제외하고,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연구학교로 지정(2년)된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 참여학교로 선정하였다. 향후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2007년에는 230억(이중 국고는 200억), 2008-2010년까지는 각각 345억씩(이중 국고는 300억) 총 1,265억원(국고 1,100억원, 지방비 16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사. 학교기업 지원사업

- **【기본개념】**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의 장이 기업주가 되어 교원과 학생들을 고용하여 교육활동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학생이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현장체험을 통해 산업 현장에 대한 적응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학교기업의 설립취지는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교원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며 기업 운영 활동과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현장 지향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기업 운영에 학생을 참여시켜서 학생의 기업 설립 및 운영 능력을 길러주고, 학교 기업에서 수익이 창출될 경우 이를 교육활동에 재투자하여 학교발전을 도모하여 학교기업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 **【지원현황】**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실업계 고등학교 5개교가 선정되어 지원되었고(지원기간 2004년 9월~2006년 8월), 이후 2개교가 추가 선정되어 지원 되는 등(지원기간 2005년 1월~2006년 12월) 총 7개교가 제1기 학교기업 실험학교로 운영되었으며, 7개교를 대상으로 1차년도 10억, 2차년도 10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다. 2006년 1월~2007년 12월까지 지원되는 제2기는 신규 12개교와 기존 1개교 등 13개교가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1차년도 19억 66백만원, 2차년도 26억 48백만원이다.

아. 전문계 고교 취업지원 기능 확충사업

- **【기본개념】** 노동부가 전문계 고교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의 강화를 통해 청년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직업진로상담, 취업행사 등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거나 직업진로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졸 학력자의 실업률(6.5%)에 비해 고졸이하 학력자의 실업률(9.5%)이 훨씬 높아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투자가 저해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 **【지원현황】** 총 사업비는 약 47억원으로 지원자격을 갖춘 전문계고교로부터 사업계획을 공모를 받아 16개 지방고용심의회별로 심사를 하여, 농업계 11개교, 공업계 71개교, 상업계 68개교, 수해운계 2개교, 가사실업계 8개교, 종합고 11개교 등 총 171개 고교를 선정확정 하였으며(노동부, 2007), 지원수준은 학교별로 기본 2천만원에 재학생수에 따라 추가 지원하되, 최대 지원액은 4천만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당해 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관련 사업 전반이 해당된다.

자. 첨단학과 개편사업

- **【기본개념】** 교육인적자원부가 새로운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첨단학과로의 개편에 소요되는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5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 **【지원현황】** 2000년에는 26개교 41개학과에 64억 1300만원, 2001년에는 118개교 243개학과에 85억 5000만원, 2002년에는 119개교 247개학과에 86억 6300만원, 2003년에는 118개교 242개학과에 86억 6300만원, 2004년에는 118개교 242개학과에 69억 3600만원 지원하였다.

〈표 2〉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주요 운영지원사업

구분	주관 부처	시작 연도	주요내용	지원현황
1.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협약학과 사업)	교육 인적 자원부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계고-전문대-산업체-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 - 제1모형<취업-진학 병렬형>, 제2모형<진학-취업 순차형>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44개사업단 (제1모형<취업-진학 병렬형>은 18개, 제2모형<진학-취업 순차형>은 26개)에 40개교의 전문대학교, 150개교의 전문계 고등학교, 326개의 산업체가 참여하며 99억 1500만원 지원 - 2007년 106억원 지원예정 - 2009년 60개 사업단으로 확대할 예정
2.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 고교 육성사업	교육 인적 자원부	2007-(지원은 2008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중앙부처가 직접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및 육성에 참여하는 것 - 제1모형<일괄위탁운영>, 제2모형<공동운영>, 제3모형<프로그램 지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모형 (1학교당 90억원) - 제2모형 (1학교당 10~20억) - 제3모형 (1학교당 2~3억)
3. 산업체 협약에 의한 특성화 고교 지원사업	교육 인적 자원부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연고산업 등과 관련하여 특성화 고교로 전환을 유도하고 해당분야 산업체와 인력양성 및 취업에 관한 협약 체결을 통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총 175억원 (각시도교육청별 1개교 X 7억원 =112억원 공모 31개교 X 2억원 내외 = 63억원)

구분	주관 부처	시작 연도	주요내용	지원현황																				
4. 농고 현장체험교육 지원사업	농림부	2006-	- 전국의 농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교육 과정을 신설·지원하는 것	- 9천만원 X 10개 학교 = 9억원, 영농학생진전대회 운영비 등 총 15억원																				
5.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사업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2005-	-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하여 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 사업	- 2005년 20개교 X 2억원 = 40억원 - 2006년 35개교 (기존 20개교 X 2억원 + 신규 15개교 X 2억원 = 70억원)																				
6.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청 (병무청,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2005-	- 관련 부처 협약에 의한 명문특성화 고등학교 확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 - 공고생은 재학 중(3학년) 프로그램에 의한 훈련을 받고 졸업 후 2년간 해당기업에 협약에 따라 취업	-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시범학교 17개교 - 2006년 시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23개교 - 2007년 신규로 13개 *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2010년까지 1265억원 투자 예정: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th> <th>국고</th> <th>지방비</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2007년</td> <td>200억</td> <td>30억</td> <td>230억</td> </tr> <tr> <td>2008년</td> <td>300억</td> <td>45억</td> <td>345억</td> </tr> <tr> <td>2009년</td> <td>300억</td> <td>45억</td> <td>345억</td> </tr> <tr> <td>2010년</td> <td>300억</td> <td>45억</td> <td>345억</td> </tr> </tbody> </table>		국고	지방비	계	2007년	200억	30억	230억	2008년	300억	45억	345억	2009년	300억	45억	345억	2010년	300억	45억	345억
	국고	지방비	계																					
2007년	200억	30억	230억																					
2008년	300억	45억	345억																					
2009년	300억	45억	345억																					
2010년	300억	45억	345억																					
7. 학교기업 지원사업	교육인적자원부	2004-	- 학교의 장이 기업주가 되어 교원과 학생들을 고용하여 교육활동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을 지원하는 사업	- 2004년 5개교+2005년 2개교 추가 총 7개교: 1차년도 10억, 2차년도 10억 9천만원 - 2006년 1월 부터 2007년 12월까지 지원되는 2기 13개교: 1차년도 19억 66백만원 2차년도 26억 48백만원																				
8. 실업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노동부	2007-	- 전문계 고교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의 강화에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171개 고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기본 2천만원에 재학생수에 따라 추가 지원하되 최대 4천만원씩 총 사업비 47억원																				
9. 첨단학과 개편사업	교육인적자원부	2000-2004 (2005년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새로운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첨단학과로의 개편에 소요되는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5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	- 2000년: 26개교 41개학과 64억 300만원 - 2001년: 118개교 243개학과 85억 5000만원 - 2002년: 119개교 247개학과 86억 6300만원 - 2003년: 118개교 242개학과 86억 6300만원 - 2004년: 118개교 242개학과 69억 3600만원																				

IV. 전문계 고등학교의 규모

1. 현황

□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문계 고등학교는 학교수(학생수)에 있어서 1970년 54.1%(46.6%), 1980년 44.7%(45.0%), 1990년 34.9%(35.5%), 2000년 39.1%(36.1%)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며, 2006년 현재, 학교수로는 33.0% (707개교), 학생수로는 27.8% (494,349명)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 전체 중에서 계열별 학교수(학생수)의 비율을 보면 공업계열이 학교수로는 30.0% (212개교), 학생수로는 37.8% (186,721명)로 가장 많고, 다음이 상업계열로 학교수로는 29.6% (209개교), 학생수로는 33.9% (167,665명)이다 (<표 3>, <표 4> 참조). 설립별로 살펴보면, 학교수의 경우 국립 0.7%(5개교), 공립 57.9%(409개교), 사립 41.4%(293개교)이며, 학생수의 경우 국립 1.1%(5,549명), 공립 50.3%(248,773명), 사립 48.6%(240,027명)이다.

<표 3>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수

(단위 : 개교, %)

년도	전체 고등학교 수 (A)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수							전문계 고교의 비율 B/A (%)
		계 (B)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수산· 해양고	전문고	종합고	
2006	2,144	707(100.0)	30(4.2)	212(30.0)	209(29.6)	8(1.1)	64(9.1)	184(26.0)	33.0

자료 :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2006). 전문계 고등학교 현황. [On-line] available <http://std.kedi.re.kr>

<표 4>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수

(단위 : 명, %)

년도	전체 고등학교 학생수 (A)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수							전문계 고교 학생 비율 B/A (%)
		계 (B)	농업	공업	상업	수산· 해양	가사· 전문	기타	
2006	1,775,857	494,349 (100.0)	16,657 (3.4)	186,821 (37.8)	167,665 (33.9)	4,415 (0.9)	33,102 (6.7)	85,689 (종합고) (17.3)	27.8

자료 : 국가교육통계 정보센터.(2006). 전문계 고등학교 현황. [On-line] available <http://std.kedi.re.kr>

- 그런데 종합고등학교에는 전문계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계 학생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통계연보에서는 184개교의 종합고등학교는 물론 여기에 재학하고 있는 85,689명의 학생이 모두를 전문계 고등학교 및 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고등학교(2,144개교)에서 184개교의 종합고등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1,960개교) 중에서 종합고등학교를 제외한 전문계 고등학교(523개교) 차지하는 비율은 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학교수로는 26.7%, 학생수로는 24.2%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종합고등학교의 학과명을 통하여 전문과와 보통과를 구분하면 종합고등학교 학생 85,789명에서 전문과 학생이 20%(16,853명), 보통과 학생이 80%(68,836)가 되는데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전문고교 학생수의 비율은 24.0%가 된다.

2. 적정규모 설정 관련 고려할 요인

가. 인력수요

- 전문계 고등학교의 인력수요의 규모를 명확히 제시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인력수요가 제시된 선행연구의 결과는 상반된 경우가 많다. 윤석천, 신광호 (1996)의 기술기능인력 수요전망 연구에서는 2010년까지 계속해서 전문계 고등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숙련공이나 다기능기술자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김형만 외(2000)의 전문계 고등학교 계열별 수요전망 연구에서는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등 전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수요가 감소하리라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문계 고등학교 수준의 인력수요의 차이에 대하여 김형만 등(2000)은 전문계 고교에서의 인력공급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산업에서 취업자 수의 변화는 수요 측면의 요인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전문계 고교의 경우에는 공급 측면의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실고 졸업생의 진학률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감소 등으로 인한 공급 제약에 의해서 산업체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수요를 전문계 고등학교가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산업체는 다른 학력계층으로 이러한 수요를 대체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대체가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와 결합되면서 전체 수요를 장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고용허가제 도입(2004. 8)으로 저숙련을 요하는 직무는 외국 인력으로 급속히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 교육수요

- 지속적인 전문계 고등학교 입학생수의 감소는 전체 고등학교 학령인구 감소(<표 5> 참조)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감소로 인한 요인에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6세~21세까지의 학령인구는 200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현재학령인구의 70%정도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도 계속해서 감소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2000년도~2002년도 사이의 초등학교 대상 학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2006년~2010년 사이에 고등학교 대상 학령인구는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5> 학령인구 변화 추이 전망

(단위: 천명)

연도	계 (6세~21세)	초등학교 (6세~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세~17세)	대학교 (18세~21세)
2005	10,537	4,018	2,064	1,840	2,615
2006	10,405	3,915	2,099	1,891	2,500
2007	10,310	3,801	2,099	1,969	2,440
2008	10,168	3,621	2,073	2,038	2,435
2009	10,011	3,428	2,028	2,073	2,482
2010	9,857	3,264	1,961	2,073	2,560
2015	8,810	2,772	1,548	1,812	2,679
2020	7,602	2,618	1,360	1,376	2,248

자료: 통계청(2007). [On-line] Available <http://www.nso.go.kr/>

- 2005년도에는 지원자수가 모집정원 대비 10,944명이 초과 지원하여 경쟁률이 1.07이었으며, 2006학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모집 정원에 있어서 3,743명 감소하였고, 전문계 고등학교 신입생 전기모집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모집정원 대비 13,043명이 초과 지원하여 경쟁률이 1.08이었는데 이와 같은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율 증가의 원인은 첫째, 대졸청년실업율 증가, 불경기 등에도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2004년 취업률 - 대학 56.4%, 전문대 77.2%, 실고 87.6%); 둘째, 2008학년도 대입제도 변경으로 내신비중 강화 및 동일계 특별전형(정원외 3%) 등으로 전문계고교가 대학 진학에도 유리; 셋째, 수업료 감면 및 장학금 지급 확대 등으로 교육비가 저렴하고 사교육비가 덜 드는 전문계고에 대한 ‘생계형 지원’ 증가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4).
-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고,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은 앞으로도 당분간 전문계 고등학교의 지원율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되며, 특히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방안 (2005. 5. 12)은 당분간 전문계 고등학교의 지원 전망을 밝게 하리라 기대되고 있다.

다. 선진국의 사례

- 주요 외국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보면 비율에 있어서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표 6> 참조), 이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규모는 나라별로 처한 경제적·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 주요 외국 전문계 고교와의 비교

구분	국외 전문계 고교와의 비교					
	한국	미국	영국	일본 ¹⁾	대만	싱가포르
전문계 고교 학교수 비율	39.1% (2000년)	-	(독립된 전문계 고교 없음)	21% (1999년)	45% (1998년)	(독립된 전문계 고교 없음)
전문계 고교 학생수 비율	36.1% (2000년)	12% (1992년)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일반계열을 포함하면 57%임)	-	22% (1999년)	59% (1998년)	14% (1999년)

주) ()는 해당 자료가 제시된 연도를 의미하며, “-”는 국가별 교육제도의 특성상 해당 수치가 산출되지 않거나, 자료간에 수치가 상이하거나, 또는 파악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

자료: 정철영 외(2000). 국외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수준 및 교육환경 비교 연구. 교육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3. 논의 및 종합

- 교육수요 뿐만 아니라, 인력수요,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전문계 고등학교의 현 규모는 현실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다만, 제한된 지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전문계 고등학교의 신설은 물론,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다른 유형으로 전환 될 수 밖에 없는 전문계 고등학교는 과감히 전환시키고 퇴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관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적정규모가 설정되고, 국가가 그 규모를 확보 또는 유지 및 지속시키는 적극적인 정책 및 법률적 지원과 다양한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별, 권역별, 단위학교별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평가, 그리고 이에 기초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1) 일본의 경우 전문고교의 학생수는 2005년 5월 현재 20.8%임.

- 2005년 5월 12일에 발표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방안”에 따르면 2005년 당시 64개교인 특성화 고등학교를 2010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후 2007년 2월 7일 확정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 주요업무계획에서는 2007년 당시 104개교인 특성화고를 2007년 말까지는 198개교로, 2009년까지는 3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2010년까지 특성화고를 200개교로 확대한다고 했던 계획이 2007년초에는 300여개로 대폭 증가한 명확한 이유가 미흡하다. 300개의 특성화 고등학교 중 몇 개를 단일형으로 할 것이고, 몇 개를 복합형으로 할 것인지, <표 7>에서 제시된 각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 전문계 고의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2010년, 2015년, 2020년에 전문계 고등학교는 학교수나 학생수에 있어서 전체 고등학교의 어느 정도 비율을 목표로 하는지가 설정되어야 한다.

<표 7> 전문계 고교 변화 예측

(단위: 개교)

구 분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특성화고 (A)	104	300	300	300
일반 전문계고 (B)	597	350	270	200
자연감축 누계	26	77	157	227
전체 전문계고 (A+B)	701	650	570	500

주) 통합형고는 확대하고 점차 일반계고로 전환하고, 일반 전문계고는 직업기초능력 강화로 고용가능성을 향상함

자료: 김종관(2007. 5. 4).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방안. 직업교육 혁신주체 특별 워크숍.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

- 참여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제(RIS)에 의한 지역별 핵심/특성화 산업계획 등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공영역 수요와 많은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도 등 지역 단위에서 전문계 고등학교 장·단기 계획과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이 더욱 더 요구된다. 각 시도별 전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은 그 편차가 크다. 2006년도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수의 경우 가장 높은 시도는 42.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장 낮은 시도는 20.3%에 불과하며, 학생수의 경우 가장 높은 시도는 46.2%나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장

낮은 시도는 19.7%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통제가 약화되고 지방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이 2005년부터 지방 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지역 단위에서 그 규모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발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규모와 함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V. 전문계 고등학교의 인적자원

1. 학생

-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문제는 자아의식(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과 제반 능력(기초수학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의 미흡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 자아의식(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고양

-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가정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다. 또한 성적이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상태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아 정체감, 자아 존중감이 낮고 이로 인한 부적응과 학습의욕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정철영 외, 2000).
- 학교부적응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가 중도탈락율인데,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 규모나 비율이 일반계 고교보다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다²⁾(<표 8> 참고).

2)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탈락율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보다 높은 이유가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기 때문이며, 그나마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중도탈락율이 그 정도에 불과한 측면도 있음.

〈표 8〉 고등학교의 중도탈락생 현황

(단위 : 명, %)

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전체학생	중도탈락생	탈락률	전체학생	중도탈락생	탈락률
1995	1,246,427	16,100	1.29	911,453	29,045	3.19
2000	1,342,482	16,520	1.24	746,986	32,188	4.31
2005	1,259,792	9,427	0.75	503,104	14,610	2.90
2006	1,281,508	10,166	0.79	494,349	12,910	2.61

자료: 교육부(1995-1999).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산업교육정책과(2000)에서 재인용
한국교육개발원(2006).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 [On-line]. Available: <http://cesi.kedi.re.kr>

- 2006년 전문계 고등학교 중도 탈락생을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54.2%(7,002명), 2학년이 34.5%(4,452명), 3학년이 11.3%(1,456명)인데, 1학년은 약간 증가 추세이고, 3학년은 감소 추세임으로 특히, 입학 후 지도와 상담이 매우 필요하다.
- 중도탈락의 원인은 부적응이 가장 높음으로 그들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서우석 외, 2007), 무엇보다도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학년 입학시부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도록 한다.

나. 제반 능력 (기초수학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의 함양

-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의 출발점 행동이 매우 낮아 현재의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 번째 대책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내용이나 교수-학습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수-학습 방법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그 방

안들을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두 번째 대책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발·확보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제고, 장학금 지급 확대, 병역혜택, 취업 및 동일계로의 계속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수학능력이 낮은 가운데서도,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높으므로 전문계 고등학교는 졸업생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한 4년제 대학 진학자의 경우, 학업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하여 성실한 학습태도가 부족하고 공부시간이 적도 학점이 낮으며, 휴학율이 2.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언, 김나라, 2006). 따라서, 대학 진학자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하기 전인 1-2월과 대학 입학 후에 전문계 고등학교와 대학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대학 수학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 끝나고 졸업하기 전인 1-2월에는 대학 수학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거나 대학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입학 후에는 개별적인 지도와 함께 해당 대학의 고교 선배와의 멘토-멘티 관계를 갖도록 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반편성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2. 교 사

- 현재 전문교원을 양성하는 체제는 사범계열 학과를 통한 ‘목적형 체제’와 교직과정을 통한 ‘개방형 체제’로 이루어진 절충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000년 현재, 전문교사의 양성은 1,389개의 학과 또는 전공계열에서 총 16,599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중등교원 양성과는 달리 사범계보다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에서 전문교사 양성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전문교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구조는 일반 중등교원 양성과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교원양성 교육과정은 전문교사의 양성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교사 양성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정철영 외, 2000).

- 첫째, 전문교사의 실험실습지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 둘째, 교직교육에 직업교육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 셋째, 전문교사의 양성과정에 산업체 현장경험의 기회가 부족하다.
- 넷째, 교양과 교직학점을 제외하고 나면, 전공학점은 60학점 내외에 불과하여 전공교과 편성이 비합리적이다.

□ 전문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산업 및 직종구조의 변화에 기초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발전계획이 마련되고, 이에 근거하여 전공영역별로 전문교사의 수급 전망 및 수요가 주기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전문교사의 수급 및 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임용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체 경력인사에게 교직연수 후 교원자격을 부여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교원에게 부전공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탄력적인 자격 및 임용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실기교사를 적극 활용하거나 팀 티칭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공식적인 연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전문계 고등학교 교원의 연수에 관한 한 연구(오영훈, 김기홍, 신익현, 1998: 84)에서는 자격연수의 경우 50% 이상이 해당 연수를 이수한지 5년 이상이 지났거나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연수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해당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의 산업체 현장적응 연수를 의무화(약 5년 주기)하고, 공동실습소의 교원직무연수(OJT)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혁신연구를 통한 교원의 변화 촉진을 유도하고 있는데(교육인적자원부, 2007c: 7), 주요 혁신연수는 직업교육 CEO과정, 전문계고 혁신리더과정, 직업교육 뉴패러다임과정 등이 있다.

□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유형 및 학과개편, 7차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한 교원 자격의 통합화, 단위 학교에서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의 전문계 고등학교의 변화는 상당수의 과원교사를 유발함과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교원은 부족하

게 되는 교원수급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그런데, 현행 교원관리체제에서는 자격제도 및 임용체제의 경직성, 획일성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교원수급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로운 전공의 신설이나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하여 새로운 자격을 구비한 교사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교사자격증 소지자만을 임용·배치하는 현 상황에서는 책임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산학점임교사나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과원교원에 대해서는 학생수 조절, 다양한 자격연수, 새로운 수요의 창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인사교류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 전문교육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전문교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학생들의 직업능력 향상에 열의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문교사에게는 정규 수업 이외에도 실습장 관리,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취업지도 등 과중한 부담이 부과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이나 보상이 뒤따르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학과의 개편 및 감축, 전문계 고등학교의 일반계 고교로의 전환 등과 같은 전문계 고교의 체제 개편, 신입생 미달의 심화,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전문교사들이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 전문계 고등학교 보통교과 교사의 비율은 55.5%(20,409명)으로 전문교과 교사 비율 44.5% (16,341명)보다 많으며,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낮음을 고려하면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보통교과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 보통교과 교사들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전문교과 교사들에 대한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 “보통교과 교사들은 전문계고의 목적 및 학생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생 소질 및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미흡하고, 전문계고 학생들이 학습에 대하여 낮은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학생 교육에 소홀하며, 전문계고 근무를 순환근무 제도에 의한 도피처로 인식하여 전문계고 보

통교과 교사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근문제도에 의해서 고령자, 병약자, 출산예정자 등 상대적으로 교수 능력이 낮은 보통교과 교원이 전문계고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병욱, 2007)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더욱 중요한 것은 보통교과 교사들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기 보다는 이들이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보통교과 교사들이 전문계 고등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소외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부터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와 함께, 보통교과 교사 양성시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방법과 관련된 교과 이수,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보통교과 교사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그리고 연수가 수반되어야 한다.

VI. 전문계 고등학교 관련 조직체계 및 예산

1. 관련 조직체계

- 관련조직은 크게 중앙 행정조직, 지방 행정조직, 산업체 및 직능단체, 전문가 단체 및 협회, 기타로 나눌 수 있다.
- **중앙 행정조직:** 전문계 고등학교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별 관련부처(노동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가 해당되며,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회의(HRD),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무 중앙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전문계 고등학교 관련 행정은 「학교정책실 과학실업교육정책과」,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과」, 「평생학습국 산학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 **지방 행정조직:** 각 시·도의 전문계 고등학교 정책을 총괄하는 시도교육청의 담당 부서³⁾와 시도군청의 산업관련 담당 부서가 해당되며, 이와 함께, 지역인적자원개발회의(RHRD), 시도지역혁신위원회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산업체와 직능단체:** 산업체에는 기업은 물론 중앙의 경제단체, 노조단체와 지방의 지역경제단체, 지역노조단체가 포함되며, 직능단체는 예를 들면 마사회가 이에 해당한다.
- **전문가 단체 및 협회:** 6개의 관련학회, 5개의 관련 교장회 및 협회, NGO의 성격을 띤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가 있다. 이와 함께 대학에 전문교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8개교가 있으며, 국책연구소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있다.
- **기타:**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등과 시도지역교육청 및 단위 학교 소재 지역의 교육관련 협의회, 포럼 등과 같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 및 모임 등이 있다.
- 현재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관련 부처 및 단체의 조직 간에 부분적으로 연계된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 과학전문교육정책과와 시도 전문교육담당자들은 1년에 적어도 한번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교육 관련 학회와 협회는 1년 한번 직업교육관련 학회 및 단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각 학회가 돌아가면서 주체를 하면서 1년에 한번, 논문 발표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시·도 교육청 별로 교과연구회 차원에서 농업교육연구회, 공업교육연구회, 상업교육연구회, 수해양교육연구회, 가정교육연구회 등과 같은 전문교사들의 연구 모임이 구성되어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시도 및 분야에 따라 활동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조직력과 활동이 약하고 전국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전문계 고등학교 관련 부처 및 단체와 기관 및 인사들이 전국적·지역적으로 조

3)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전문계 고등학교 관련 행정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라 과학교육, 평생교육, 진로교육, 또는 교육정보 등의 업무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별로 전문계 고등학교 담당과는 직업진로교육과(서울), 과학산업교육과(대구, 경기, 경북), 과학실업교육과(충북, 전남), 평생직업교육과(전북)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명명하고 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은 시도에 따라 직업교육, 산업교육, 실업교육 등과 같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문계 고등학교 관련 위원회(중앙 및 지역의 인적자원개발회의, 국가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 관련 부처(농림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및 행정기관(시·도 군청), 산업체 및 직능단체, 전문가 단체 및 협회(학회 및 협회,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 연구소 연구원), 기타(학운위, 동창회, 지역모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종합적인 조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전담하는 핵심부서가 존재해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내와 타 부처의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과의 연계가 더욱 공고화되어야 한다.
- 전문계 고등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교육 관련 전문가 단체, 즉 학회와 협회, 그리고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의 협의체가 공고히 조직화되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문계 고등학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조언하고 때로는 압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관련 기관과의 매개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현안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직체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선학교의 전문교사들과 유기적인 의견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예 산

- 1995년 이후, 고교에 대한 직업교육 지원과 전문계 고교에 대한 지원과 일반계 고교의 직업교육 지원 예산은 1997년에 각각 1,261억원, 1,02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2004년 지원예산은 488억원에 불과하였다(<표 9>, <표 10> 참조).

〈표 9〉 1995년~2000년 교육부예산 중 직업교육예산 구성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고교 직업교육 지원	80,131 (51.7)	99,320 (40.2)	126,100 (33.5)	120,465 (34.4)	70,127 (21.6)	55,633 (18.4)
전문대학 교육 지원	74,855 (48.3)	94,614 (38.3)	148,700 (39.5)	165,964 (47.4)	192,036 (59.1)	187,115 (61.7)
산업대학 교육 지원	-	52,966 (21.5)	101,300 (26.9)	63,921 (18.2)	62,544 (19.3)	60,281 (19.9)
총 계	154,986 (100.0)	246,900 (100.0)	376,100 (100.0)	350,350 (100.0)	324,707 (100.0)	303,029 (100.0)

자료: 교육부(해당연도). **예산개요.**

〈표 10〉 전문계 고교 및 전문대학 지원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문계고 예산	1,021	972	513	474	506	508	500	488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전문대 예산	939	1,220	1,476	1,664	1,664	1,805	1,786	1,750	-

자료 : 직업교육 혁신 공동 TF팀(2004.12.17). **직업교육 혁신방안(시안)**, p. 19.

- 이는 문민정부의 직업교육개혁방안(1996)에서 직업교육의 중심축을 중등 이후 단계로 이동시킨다는 표현을 쓴 이후 전문계고교 예산은 매년 감소한 결과이며, 더욱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2004.7.6)’에 의해 종전에 국가에서 지원되던 전문계고교 관련예산이 2005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 2004년 대비 2006년도의 16개 시도교육청의 전문계고교 관련 예산 확보율은 88%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04년도 지역으로 전문교육 예산을 전면 이양하면 전문교육이 방치될 우려가 있기에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직업교육은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교육 예산을 전면 지방으로 이양하였고, 그 결과 전문교육 관련 예산이 지역 이양 이전인 2004년도에 비해 전국 평균 17% 감소되었고 심지어는 50% 이상 감소된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투자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 교육인적자원부 외의 다른 정부부처의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이루어지고는 있지만(<표 11>, <표 12> 참조), 지속적이거나 계획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나승일 외, 2007).

<표 11> 정부부처의 전문계고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해수부	정통부	문광부	노동부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중기청	계
2003년	10,589	1,925	258	52	200	35	932	434	14,425
2004년	10,370	290	250	410	200	-	130	430	12,080
2005년	11,000	-	-	3,000	1,000	-	1,500	2,300	18,800
2006년	11,300	-	-	3,000	4,000	-	1,500	4,000	23,8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2).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실업고 육성계획 (안). 교육인적자원부. p. 2.

<표 12> 전문계고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2006년도)

구분	산자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중기청	농림부	계
지원예산(억원)	70	100	175(특교)	50	15	410
사업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협약학과 (고,대, 업체)	산업체 협약학과	맞춤형 인력양성	-	-

자료: 김종관. (2007. 5. 4).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방안. 직업교육 혁신주체 특별 워크숍.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

- 전문계 고등학교의 유지 및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 및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중 일정비율을 직업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방안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성 높은 지원체제 유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재정 평가시 반영, 시도교육청 평가시 “전문계 고교 관련 예산 확보” 부분의 배점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 예산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직업교육 투자에 대한 정책수단 상실로 인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지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방으로 이양된 직업교육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것이다.

Ⅶ. 결론

- 전문계 고등학교의 혁신과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다음으로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셋째는 개별학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국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무엇보다도 지원이 확고해야 한다. 전문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직업교육 문제는 시장 기능에 맡기기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기에 미국의 경우에도 전문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직업교육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 관련법들이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배정된 직업교육관련 예산이 직업교육분야에만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직업교육의 개념도 협의의 개념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직업교육진흥 국민연대에서 제안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신황호, 2007)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법적·제도적인 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지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전문교육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에 보다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구축되어야 하고, 정책 담당자, 학계·재계·노동계·언론계 인사들이 포함된 발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과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단위학교에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 정책 및 지원에 비하여 일선 학교들은 수동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구성원 개개인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단위학교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혁신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주도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장의 전문교육에 대한 애정 및 확고한 신념과 높은 역량,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이러한 역량과 노력을 촉진

하는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 전문계 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규모, 목적, 체제, 운영 등에 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정부나 기관장이나 또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국가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와 관련 산업체 및 직능단체와 관련 현황과 취업 및 고용 동향 등에 관한 기초 자료가 정확히 파악 및 정리되고 주기적으로 up-date되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문계 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계 고등학교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만들고 관련 기관 및 인사들과의 유기적이고 공고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직업교육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전국 차원에서 ACTE (Association fo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를 조직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동연구는 물론, 법률의 입법과정이나 예산이나 정책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ACTE는 12개의 분과와 5개의 지역별 모임으로 구성되어 분과별, 지역별 모임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문교사들을 포함하여 중앙 및 지역의 협의체를 조직화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응집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 중학교 졸업후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비슷한 능력의 동급생 보다 졸업시에는 더욱 의연하고 능력있는 한 인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위학교 차원보다는 국가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수집 및 분석되고, 이를 기초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연홍(2007.3.15). 현 단계 직업교육정책의 주요 방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교육 세미나 발표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a. 2. 7). 2007년 주요업무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_____ (2007b. 2. 7). 2007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_____ (2007c. 2. 7). 희망을 실현하는 실업계고 육성전략. 교육인적자원부.
- _____ (2007d. 2).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실업고 육성계획 (안). 교육인적자원부.
- _____ (2007e. 4. 9). 실업계고 육성 전략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김기홍, 정윤경, 이정표(2006). 산학관 연계 강화를 통한 실업계 고교 경쟁력 확보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미숙(2007. 4. 10). 학습-고용연계 직업교육체제 구축.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발표자료.
- 김선태(2006). 통합형 고등학교 일반화 및 확대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용익(2007. 5. 4).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과 직업교육. 직업교육 혁신주체 특별 워크숍.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
- 김종관(2007. 5. 4).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방안. 직업교육 혁신주체 특별 워크숍.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
- 나승일 외(2007).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 노동부(2007).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07-11).
- _____ (2007. 6). 2007년도 전문계 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지원고교 선저결과 및 사업내용.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청년고용팀.
- 서우석 외(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 개선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 활성화 방안. 직업교육연구, 26(1), 95-118.
- 신황호(2007. 4. 16). 직업교육진흥 특별제정법(가칭) 제정 촉구를 위한 국민 제안.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

- 윤종혁(2007.4.9). 미래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방안.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발표자료.
- 이무근 외(2007. 2).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종합발전방안 (2007~2010). 대구광역시교육청.
- 이병욱(2007. 4. 9).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발표자료.
- 임언, 김나라(2006). 실업계고 출신 대학 진학자의 적응실태 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재정경제부(2007. 5. 17).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 인적자원활용분야 추진계획.
- 정철영 외(2007. 2). 충청남도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방안. 충청남도교육청.
- 정철영(2007. 1). 직업교육 CEO 강의 자료. 서울대학교.
- 최지희(2007. 5. 14). 학교와 직업으로의 경로의 대전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 세미나. 41-61.
- Harkins, A.M. (2002). The Future of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n a Continuous Innovation Society. Columbus, Ohio: National Dissemination Center fo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 Lynch, R.L. (2000). New Directions for High School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Columbus, Ohio: ERIC Clearinghouse on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 Pucel, D.J.(2001). Beyond Vocational Education. New York: Eye On Education.

주 제 발 표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김 경 회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주 제 발 표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김 경 회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I. 왜 대학에서 직업교육이 중요한가?

1. 대학의 기능 변화

- 고등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엘리트 양성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준의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요구됨
 - ※ 해당연령 중 대학생 비율에 따른 대학의 기능변화(Trow 고등교육단계이행론)
 - 엘리트(15%)→대중화(15~50%)→보편화단계(50%이상)
 - 한국 취학률 : '80(11.4%)→'90(23.6%)→'95(36%)→'00(52.5%)→'04(61.7%)

2. 저출산으로 학령아동 감소

-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의 생존전략으로 인력양성 수준 및 분야별 특화 필요
 - ※ 전문대학 미충원율('05) : 수도권 3.1%, 지방 26.2%

- ※ 대학 미충원율('05): 전체 8.9%(전남 33.9%, 강원 21.5%, 광주 19.8%, 전북 17.5%)
- 저출산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가 심화될 전망이다
- ※ 고교 졸업자수 감소추이 : 56만명('05) → 57만명('09) → 63만명('13) → 54만명('18) → 49만명('20) → 43만명('21)

3. 청년실업

- 청년(15-29)의 실업률은 7~8% 수준으로 전체 실업율의 2배를 상회하고 최근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취업준비자 등 취업 애로층의 증가로 체감실업은 지표상의 실업보다 심각(보완)
- ※ 청년실업률/전체 실업률 : 7.0/3.3(02)→ 8.0/3.6(03)→ 8.3/3.7(04)→ 8.0/3.7(05)→ 7.9/3.5(06)

〈청년 취업자수 및 취업애로층 추이〉

(단위: 천명)

구 분	'03	'04	'05	'06	'07.1/4
생산가능인구	10,368	10,141	9,920	9,843	9,850
취업자수	4,606	4,578	4,450	4,270	4,237
실업자(A)	401	412	387	364	346
취업준비자(B)	268	297	351	413	409
쉬었음(C)	225	258	278	258	265
협의를 취업애로층(A+B)	669	709	738	777	755
광의의 취업애로층(A+B+C)	894	967	1,016	1,035	1,020

자료: 2007년 제4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안전(노동부)

-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대졸자의 공급과잉 심화

〈대학진학률 및 졸업자수〉

(단위 : %, 천명)

구 분	'90	'95	'00	'03	'06
대학진학률	33.2	51.4	68.0	79.7	82.1
졸업자 수	258	342	464	536	526

※ 외국의 대학진학률 : 일본 49.1%, 미국 63.4%('04년도)

- 그러나 학력수준별 불일치(하향취업)는 OECD 국가들보다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없음.

참 고		학력수준별 불일치(하향취업)	
❖ 조사내용			
○ 취업자 직무와 학력수준간 일치도 조사(조사자에 따라 주관적/객관적 방법 사용)			
❖ 조사결과			
○ 연구자간 조사방법, 기초자료 차이 등으로 조사 결과치 상이			
구 분	분석자료	분석 결과	
		객관적 방법	주관적 방법
직업능력개발원('05)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14.8% 전문대 9.9% 4년제대 19.5%	20.9% 전문대 20.7% 4년제대 19.0%
노동연구원('05)	중고원 청년패널	-	22.8%
중앙고용정보원('04)	중고원 OES자료	27.9%	-
○ 그러나,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가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님			
※ Groot and Maassen(2000)이 OECD 각국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 이수자 중 직업수준 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비율의 평균은 26%			

4. 숙련 불일치

- 대졸 인력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간의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는 노동시장에서 재교육 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대학졸자에 대한 평가 인색
- 질적 불일치에 대해서는 분석방법에 따라 결과치에 편차를 보이니 불일치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① 전공일치도 :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설문조사에 의한 주관적인 방법이 개관적인 방법보다 전공일치도가 높은 경향

※ 통계청 조사 : 실업고(전문계고) 43%, 전문대 57.7%, 대졸이상 67.7%

② 대학교육 만족도(직업기초능력 수준) : 불만족 보다 만족 비율이 다소 높음

※ 기업 만족도 : 직능원 전문대 3.08, 4년제 이공계 3.25(5점만점), 경총 74.3%(보통이상 만족)

③ 기업의 신입사원 재교육기간·비용 : 기관마다 조사기준이 달라 결과치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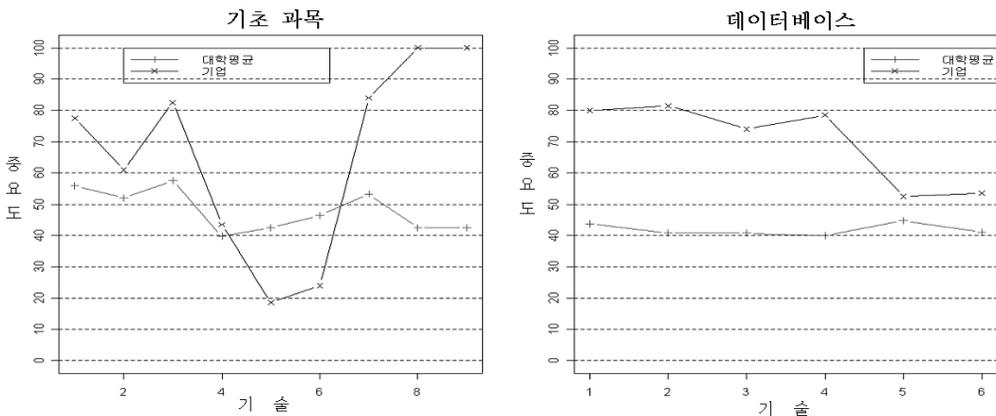
구 분	재교육 기간	재교육 비용
직능원('06)	평균 8.36개월	평균 248만원
경 총('05)	평균 20.3개월	평균 6천 218만원
전경련('03)	평균 2년	평균 1천만원

※ 재교육기간은 오리엔테이션, 수습훈련기간 포함여부, 재교육비용은 임금 등 기회비용 포함 여부에 따라 다름

○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S/W분야 관련 기술 8개 영역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기업은 기술변화에 민감하여 신기술 등 기술요소 간 선호가 분명한 반면, 대학은 그러하지 못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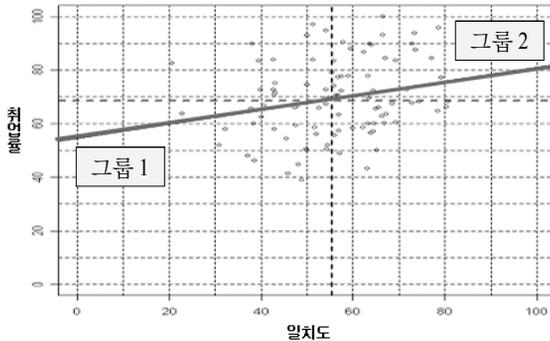
※ 예시) 기업은 기초과목에서는 기술요소 중 개발방법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Oracle 등을 중시한 반면, 대학은 기술요소 간 중요도 차이가 거의 없음

〈 대학과 기업의 기술중요도 〉



- 조사결과, 질적 일치도 평균은 55.89점(100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지 않으며, 대체로 실습, 프로젝트위주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 높은 편임

- 대학·기업 간 질적 일치도가 높을수록 대학의 취업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취업률과 질적 일치도와의 상관관계 >



	일치도 평균	취업률 평균
그룹 1	43.97	56.37
그룹 2	64.48	82.44

5. 개인과 산업경쟁력의 토대

- 대학교육이 직업으로 연결되고, 직무훈련을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직업대학체제(school to work, work to school)가 구축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직무훈련 소외로 인한 양극화, 실업으로 인한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II. 대학교육의 주체(stakeholders)들이 보이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교육

- 대학은 산학연계형 교육과정의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대학생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
 ※ 대표적인 사례: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 현장체험교육프로그램

(샌드위치 교육과정, 노동부/중기청 주관 직장체험 프로그램), 졸업인증제(외국어, 컴퓨터, 인성 등), 취업정보 서비스 등

- 그러나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대학 스스로 변화 노력은 부족
 - ※ 대학교육의 사회요구 부합도는 50위, 유능한 엔지니어를 노동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54위(61개국 대상, IMD, '06)

2.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 저조

- 기업은 인력양성의 공동 책임의식이 약하여 인력의 수요자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대학과 교류가 활발치 못함.
 - 기업과 대학의 교육/연구에 대한 시각차이: 대학은 장기적·원천적 기술개발 및 창의적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기업은 단기·실용적 기술개발 및 즉시 현장투입 가능 인력 요구
 - 기업의 요구를 명확히 대학에 전달하는 소통통로가 취약하여 산업계는 대학측에 기술개발·인력양성에 대한 명확한 수요를 제시하지 못함
 - ※ 산업계의 공과대학에 대한 수요표출 불명확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SERI, 06): 산업계의 58.1%, 대학의 77.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답변
 - ※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중개조직으로 현재 10개 산업에 Sector Council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 활동은 미흡(상근직원이 1~2명 수준)
 - 기업의 투자는 단순 기부성격이 많고, 대학 연구역량 강화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투자비율은 오히려 감소 또는 정체
 - ※ 기업의 R&D 투자 중 대학지원 비중(과기부,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조사)

구 분	'00	'01	'02	'03	'04
기업 전체 연구개발투자(조원, A)	9.5	11.2	12.2	14.0	16.4
대학 지원(억원, B)	2,300	2,200	2,300	2,400	3,300
비중(B/A, %)	2.4	2.0	1.9	1.7	2.0

3. 교육-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정보 인프라 부실 및 정부재정지원 미약

- 정부는 대학-노동시장간의 관계망을 재구조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
 - ※ 산학협력단 설치: 333개/ 356대학, 주요 5개 부처에서 19개 단위사업에 1조 3303억원 지원, 취업률 공표(04~)
- 그러나 대학에서 일의 세계로 이동하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업 역시 인재선발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
 - ※ 부처별 산발적인 인력수급 조망, 진로지도, 직업정보, 학교 등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종합 네트워크 구축 필요(HRD-net, Work-net, Career-net 등 관련 시스템의 연계 부족)
- 또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7.089\$로 OECD 평균 11,254\$의 63%에 불과하고 부담주체도 국가부담은 24%에 불과하여 OECD 평균 74%의 1/3 수준에 불과

Ⅲ. 정부는 대학의 직업교육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1. 산업계 수요를 대학교육에 반영하고 투자 확대 유도

가.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평가

- 산업계 입장에서 공과대학의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종합 평가하는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공학교육의 변화를 유도

	기존 대학 평가	산업기여도 평가
평가내용	교육여건 개선 등 투입측면 * 대학운영전반(특성화·재정·학사관리·연구여건 등)	산업계 만족도 조사(수요측면) * 배출인력 및 공동연구성과에 대한 만족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등
평가방식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별 평가	학과별 평가

※ 전자·조선산업 Sector Council에서 해당학과에 대한 산업기여도 시범 평가 실시 ('07년, 예산 4억원)

- 직업능력개발원을 평가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SC와 역할 분담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대학에 제공하여 피드백→ '08년 이후에는 철강·기계 등 10대 산업으로 확대하여 2~3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중장기적으로 각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활용

나.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 인턴십 프로그램 등 대학의 현장실습 활동 지원 실적, 대학에 대한 R&D 투자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실시
 - 단기적으로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 R&D과제 가점 등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적 지원방안 등 검토
 - ※ 인증된 기업에 대한 금융대출 시 혜택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개발 검토

다. 산업계의 대학에 대한 투자에 세제 혜택 확대

- 「산학협력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기업체 기부금의 손금 인정범위 확대(현행 75%→100%) 등을 통해 산업계의 대학 투자 유인 강화
 - ※ 기업체 기부금 손금 인정범위는 현재, 한시적으로 '08년도 까지 소득금액의 75%, 09년 이후에는 5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

2.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노력 지원

가. 전문대학에 학사과정 설치

- 전문대학 졸업 후 산업체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공심화과정 이수시 학사학위 수여
 - ※ 학위수여 근거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07.6월 현재 국회 계류 중)
- 산업단지의 인근 전문대학이 재직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업교육혁신센터」 시범 운영
 - 산업단지 내의 기업지원기관과 인근 전문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 센터를 통해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수요를 파악, 대학이 ‘찾아가는(출장식) 맞춤형 협력 교육“ 제공
 - ※ '07년 신규사업 : 2~3개 단지, 10개 학위비학위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당 1억원)

나.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확대 추진(2단계 균형발전대책의 일환)

-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지방대학의 지역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08~'13)
 - 산학협력중심대학의 수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되, 신규 선정대학은 지방대학으로 한정(대학 수 23개⇒ 40개, 지원예산 연간 520억원⇒ 1,000억원)
 - ※ 1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04~'08)
 - 8개 권역 산학협력 중심대학 선정(대학 13개, 전문대 10개), 기술개발·지도·이전, 인력양성 및 장비구축 등 지원(대학 연간 440억(교육부/산자부 공동), 전문대 연간 80억)

다. 산학협력 활동 참여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교수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참여 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산학협력 참여 교수에 대한 직접적 인센티브 강화
 - ※ 교수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보상 예시
 - 산학공동 프로젝트의 지원금 수주액수나 특허권획득, 벤처창업 실적 등을 적절한 지표 개발을 통해 SCI 논문 저작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
 - 일정 수 이상의 업체를 담당하는 교수에 대해서는 책임강의시수 감면
 -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배분 시 개인교수의 인센티브 확대

라. 학교기업의 금지업종 완화

- 학교기업 금지업종 완화를 통해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 강화와 대학의 재정 수입 확대
 - ※ 학교기업 지원사업 : 50여개 학교기업에 연간 총 150억원 지원('07)
 - ※ 학교기업 금지업종 : 백화점 등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종, 임대업 등 부동산업, 영화관 운영업 등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세탁업등 서비스업종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별표)

마. 산업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 지원

- 전문대 및 대학의 직업관련 교육과정을 산업계가 참여하여 개발
 - ※ 직업중심 교육과정 개발비 지원 : 30개 전공 각 2억원씩 총 60억원 지원('08)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의 역량 제고를 통해 해당 산업분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도록 지원
 - ※ 10개 Sector Council(기계, 전자, e-Biz,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반도체, 섬유, 자동차, 조선, 철강산업)에 2억원씩 총 20억원 지원('08)

바. 우수 강의내용 공개

- 대학교수의 우수 강의내용을 공개(인터넷 활용)함으로써 대학사회의 지식공유 문화 및 우수사례 확산 유도
 - ※ 50개교 각 1억원씩 총 50억원 지원('08)

3. 대학-노동시장 간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보 확충 및 유통촉진

가. 대학의 직업교육 성과 측정 공개

- 대학의 교육적인 성과를 조사하고 D/B구축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경쟁체제 마련
 - 대학별/학과별 취업률 공표하여 학생 등 수요자에게 대학, 학과·전공 선택을 위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대학의 진로(취업)지도와 교육과정 개선 유도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개요
 - 조사 기준 및 기관 : 매년 4월 1일('04년부터 실시), 한국교육개발원(KEDI)
 - 조사대상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졸업자 56만여명
 - 졸업생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및 기업의 졸업생 만족도 조사 실시('08년~)
 - ※ 산업계와 협력하여 매년 10억원씩 총 20억원 지원
 - 대학교육 관련 정보(예 : 대학교육 투입요소인 예산·교원 등, 발전계획, 특성화 전략, 성과지표인 졸업률·취업률 등)를 일반에 공개 의무화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07.4.30)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학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각종 통계(패널데이터 및 통계 분석·예측 시스템) 확충

나. 대학생 기초직업능력 평가제도 도입

-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대학생의 직무핵심능력 진단평가제도 도입방안 수립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한 공론화 추진

- ※ 산업계(전경련, 대한상의), 학계, 대교협,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
- 대학생 직무핵심능력 평가영역·하위 구성요소 선정 및 평가문항(도구) 개발
- ※ 대학, 기업, 학계의 전문가로 평가영역선정위원회 및 문항개발위원회 구성·운영
 - ▶ 미국 CLA :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 작문능력
 - ▶ 호주 GSA :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작문능력
- 시범실시를 통한 진단·평가도구 검증과 측정영역 및 문항 확정('08)
-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제도의 본격 추진('09)
- ※ 대학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entry test 3월, exit test 10월) 진단평가 실시, 결과 발표 및 컨설팅 실시

〈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

- ▣ **대학생** :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능력에 대한 진단 및 육성 가이드 제공으로 **취업기회 확대**
- ▣ **대 학** : **산업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 ▣ **기업체** : 대졸자의 직업능력 향상으로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 감소**

다. 국가직무능력표준(KSS) 개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을 개발하여 교육·훈련, 자격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자격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07.4월)
 - ※ '03~'06 실적 : KSS 3종(실내건축, e-biz, 반도체) 시범개발, KSS 활용(학교급별) 교육과정 3종 시범개발, e-biz 분야 대학·전문대학 교육과정에 시범적용

라. 인력수급 전망의 신뢰성 제고

- 부처간 협의·조정을 위한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 “인력수급전문위원회” 구성 ('07.2, 12개 관계부처 실국장, 9개 연구기관 장 등 총 21명)하여 부처별 인력수

급 전망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 기능 강화

- 기초통계 확충, 분류체계 정비 등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연구기관 간 “인력수급전망공동연구위원회” 구성하여 전망을 실시하여 전망의 신뢰도 제고

마. 교육-노동시장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진로지도 강화

- 미래의 직업세계 발간 및 보급을 통해 직업세계의 동향과 노동 및 교육·훈련시장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2년주기, 매 짝수년도 발간)
 - ※ 초·중·고, 대학 등에 책자를 3천여권 보급하고 커리어넷에 탑재
- 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Career-net)을 통해 진로 탐색, 상담 등 진로개발 관련 토털 서비스 제공을 통한 평생 진로개발 지원
 - ※ 커리어넷 누적회원 수 150만명, 심리검사 137만건, 사이버 상담 13천건('06)
- Work-net·HRD-net(노동부), Career-net(교육부) 등 관련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효율적 운영
- 국가진로교육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으로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부처간 파트너십 구축 및 관련 법체계 정비

IV. 토론주제: 고등교육의 직업교육강화방안으로 직업교육중심대학 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한가?

가. Alternative University로서 직업교육중심대학의 특성(예시)

- 대학교육이 직업으로 연결되고, 직무훈련을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중심대학
 - 연구중심대학은 고급인력 양성에 집중, 기업의 투자 유인 강화

- 직업중심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를 통한 직업관련 교육의 공급 인프라로서 대학의 커리큘럼과 교수진, 교육과정이 현실에서의 직업에 적합하도록 재구성성화 유도

○ 일반대학과의 차이

		일반대학	직업중심대학
입학자격		-학령기 학생 위주 -수능과 내신이 주요 요건	- 학령기 학생, 재직근로자 - 현장 경험
학위체계		- 경직된 시스템	- 유연한 시스템 (일과 직업의 세계의 넘나들이 자유로움 / 직업경험을 인증 / 2년제,4년제, 전문직업학위의 연계 가능) - 직업전문학위(석사, 박사)
교수진		- 박사학위가 1차 채용조건 - 교수의 형태가 단순	- 실무경험이 1차 채용조건 - 실습전담 교수 확보
평가 방식	교수 평가	- SCI 논문 중심	- 산학협력 건수 - 현장 중심형 수업 - 취업률
	학생 평가	- 학문(이론) 중심의 평가 - 학제	- 현장실습이나 프로젝트 수업 비중 높음 - 직업경험 인증 - 포트폴리오 평가
	학교 평가	- 독자적인 평가 기구 없음 - 산업체 평가 미약	- 독자적 전문평가기구 있음 - 산업체가 평가
취업		- 입학과 취업의 연계성 취약	- 입학이 바로 취업
운영 방식		- 졸업하고 나면 끝	- 학교세계와 직업세계가 자유롭게 넘나들 - 순환교육(재교육 가능)
학생서비스		- 미약 - 행정직원의 권위적 자세 - 진로서비스 기능 미약	- 철저한 수요자 지향 - 행정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 직업 진로서비스 강화
교육과정 개발		- 학문중심 교과과정 - 미스매치 극대화	- 직업세계를 반영한 실무형 교과과정 개발 - 산업체와 공동 개발 - 미스매치 최소화
교수학습 방법		- 전통적 이론 중심	- 문제해결 학습 - 프로젝트 학습 - 온라인 시스템 적극 도입(가상체험 학습)
등록금		- 학부모 부담 높음	- 최소화 (무료, 실비)
산학협력		- 산업체와 대학의 동상이몽 - 작동 안됨	- 실질적인 산학협력 (주문식 교육, 취업, 실습 등)
학교 시설		-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 미비	- 첨단시설 장비 - 양질의 실험실습 인프라
산업체 만족도		- 불만족	- 만족도가 높음

주 제 발 표

평생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최 지 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주 제 발 표

평생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최 지 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I. 평생학습 시대의 도래

1.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국가가 지닌 인적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국가의 인적자원이란 결국 국민이 평생에 걸쳐 얼마만큼 학습능력을 축적해 나가며, 사회적으로 이러한 학습기회를 뒷받침할 기반이 얼마만큼 마련되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이같은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필연임을 입증해 준다. 저성장·저고용,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구조의 성숙으로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능력이 둔화되고, 세계화, 지식정보화 등에 대한 경제주체별 적응능력의 차이는 산업 및 기업 간의 양극화, 고용·소득 측면의 양극화로 연결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령기’⇒‘경제 활동기’⇒‘제 2 인생기’에 이르는 평생에 걸친 학

습기회의 제공은 인적자본의 형성·활용·축적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기업의 생산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용유연화의 진전에 따라 평생직장 시대에서 평생직업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근로자’ 만이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성인의 평생학습의 3분의 2 이상을 직업능력개발을 차지하는 등 평생학습에서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OECD, '03)

2. 평생학습 사회에서 교육의 축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이동

교육의 공급의 측면에서 볼 경우 평생학습 사회의 도래를 야기시킨 주요한 전환점의 하나는 교육의 축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한때 고등학교 졸업장도 희귀한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관심의 초점이 고등학교를 이수했는가 여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얼마만큼 평생에 걸쳐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진학여부 및 고등학교 교육 이수여부가 정책의 초점이 되었다면 이제는 대학진학도 일반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OECD의 한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급격한 고학력화의 진전으로 학교교육이 포화점에 이른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OECD)

<표 1>에는 과거 50년 동안 OECD 국가에서 고등학교 교육 이수자의 신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나타난 바대로 2005년 기준 25-34세 연령층(1970년 출생자)의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가 9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가 95%, 일본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94%로 나타난다. 한편 1970년대 출생한 코호트의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 수치를 1940년대 생 코호트(55-64세)와 비교할 경우 한국의 경우 32%에 불과해 약 30년 동안 고등학교 교육이수자의 비율이 약 3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국별로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의 신장의 속도는 다르나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가 모든 OECD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OECD 후기중등교육 이상 이수한 인구¹⁾의 연령별 비율(2003) (단위:%)

OECD 회원국가	연 령				
	25-64	25-34	35-44	45-54	55-64
호주	62	75	64	58	47
오스트리아	79	85	83	75	69
캐나다	84	90	86	83	71
체코	86	92	90	84	77
핀란드	76	89	85	73	55
프랑스	65	80	69	59	48
독일	83	85	86	84	78
헝가리	74	83	81	75	53
일본	84	94	94	82	65
한국	73	97	83	55	32
멕시코	21	25	24	18	12
네덜란드	66	76	71	62	53
노르웨이	87	95	92	85	76
포르투갈	23	37	22	16	10
스페인	43	60	48	33	19
스웨덴	82	91	88	80	69
스위스	70	76	72	68	61
영국	65	71	65	64	57
미국	88	87	88	89	85
국가평균	69	78	73	65	55

주: 1) 후기중등교육에서 ISCED 3C 단기교육 프로그램은 제외됨.
 2) 영국의 경우 ISCED 3C의 일부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함.
 3) 네덜란드의 경우 2002년도 자료임.
 자료: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 .

이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를 넘어서서 대학교육의 보편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진학율의 성장과 고학력화로 인해 신장된 학력은 오히려 평생학습의 시대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교육 시대에서 학교교육은 학습을 완성하는 장소라기보다는 학습의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3.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증가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소득 2만불 시대의 국민의 요구는 취업과 고용, 더 나은 소득 등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삶의 질 추구, 일과 삶의 조화,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등 보다 다양한 욕구로 표출되고 있다. 기술개발 주기의 단축, 높은 이직가능성으로 인해 재직자의 능력개발의 필요성 증대, 동시에 낮은 출생율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여성과 고령자에 대한 인력수요를 증가시켜 능력개발 수요의 증가가 야기된다.

이같은 현황에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요구가 특별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재직 근로자, 중고령자, 여성을 들 수 있다.

먼저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근로자와 재직자의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시적인 기업의 구조 조정에 조기퇴직 및 비관련 분야로의 전직 압력 가중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 점증됨에 따라 재직 근로자의 자기주도적인 경력개발 지원 확대 필요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채용관행 변화에 따른 청년 실업 증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취업능력(employability)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지원 필요하게 된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20~30대의 이직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능력을 갖춘 이들의 전직과 이직을 지원할 체계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구조적 부족 초래로 중고령자와 여성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고령자, 퇴직자에 대한 직업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노동력 부족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데 따른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 지원이 필요할 것이 예상된다.

평생학습 시대의 도래는 이와 같이 평생학습을 통한 무한한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의 집단간 차별의 위험성을 동시에 제공하기도 한다. 취업형태별, 계층별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기회와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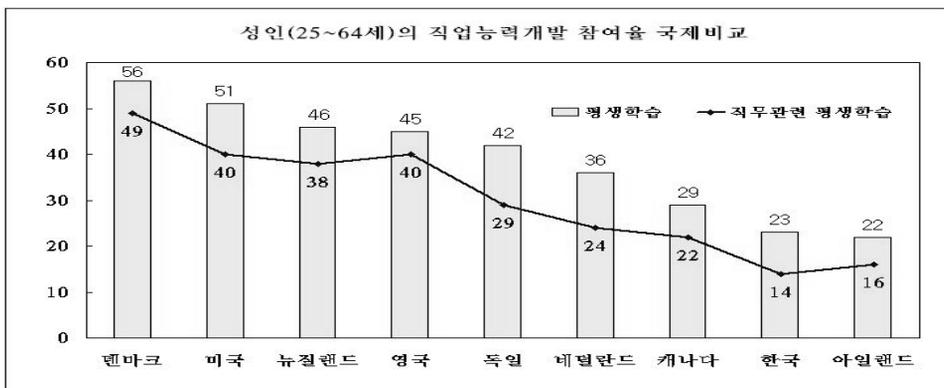
근, 그리고 그 결과의 차이는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 개인의 자아실현의 기회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II. 우리나라 평생학습 체제의 문제점

1. 낮은 평생교육 참여율

평생학습에 대한 이같은 시대적 요청과 학습자의 높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시대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준비상태는 아직 그리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없다.

먼저 [그림 1]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25-64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3%에 불과하며 이는 덴마크 56%, 미국 51%, 영국 45%, 독일 42%와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치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 성인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평생교육 참여율은 더욱 더 낮다. 우리나라 25~64세 성인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14.1%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 성인(25~64세)의 직업능력개발참여율 국제비교

자료: OECD '02년, 우리나라 '04년(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기준

주: 참여율 기준·해당연령 인구 중 1년에 1번이라도 직업훈련·연수 등에 참여한 자(재학생·재수생 제외)

이같이 성인의 평생학습참여가 저조한 것은 2004년 한국에서 실시된 ALLs(Adult Literacy and Lifeskill Survey)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표 2>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매우 낮으며 형식 및 비정규 교육 참여율 모두 매우 낮게 나타난다. 특히 형식(정규)교육 참여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감소하며 학력이 낮아질수록 감소하는 성향을 보여준다.

<표 2> 우리나라 성인의 형식, 비형식 유형의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학습참여		형식(정규)		준형식(비정규)		
	N	참여율(%)	N	참여율(%)	N	참여율(%)	
전체	531	11.1	312	6.5	234	4.9	
성별	남자	250	10.7	155	6.7	103	4.4
	여자	281	11.5	157	6.4	131	5.3
연령	10대	48	61.5	11	14.1	45	57.7
	20대	203	19.4	87	8.3	128	12.3
	30대	142	9.9	109	7.6	31	2.2
	40대	101	8.5	75	6.3	21	1.8
	50대	29	4	23	3.2	9	1.3
	60대	8	2.5	7	2.2		0

자료: 임언(2006). 『한국 성인의 직업기초능력 실태와 형성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에서 재구성

2.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취약성

우리나라 평생학습 진흥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점으로 전반적인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평생학습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제 평생학습의 진흥은 이제 개인의 몫일 뿐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평생학습의 진흥 자체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아가는 추세이다. 이제 평생학습은 해당 국가의 현재 평생학습의 진흥 정도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정책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영역이 되고 있다.(OECD, 2006) <표 3>에는 OECD가 제시한 평생학습의 주요 6대 정책 영역들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제시된 평생학습의 정책목표는 OECD

가 시행한 ‘평생학습의 주제별 고찰’ 프로젝트의 시행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OECD 17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들이 평생학습에 있어서 어떠한 영역이 공통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표를 살펴봄으로서 각 국가가 평생학습의 어떠한 영역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참여의 촉진

첫 번째 평생학습의 정책영역은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통해 개인의 지닌 지식과 기술을 촉진시키는 문제이다. 이를 위한 평생학습 정책목표는 모든 성인이 기초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서, 개인의 배제를 방지하고 사회적 통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의 기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평생학습을 촉진시키는 방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평생학습 참여의 계층간 불평등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영역은 평생학습 기회에 있어서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영역이다. 학습기회 및 접근에 있어서 항상 계층간 격차가 나타나기 마련이나 평생학습의 경우 학교교육 부문에서 보다 소득 및 학력에 따른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생학습 기회에 있어 특히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OECD는 중고령층 근로자, 저학력, 저숙련 집단을 주의하고 있으며 이들 집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생학습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신속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중고령층 집단, 기술변화에 민감한 저숙련 집단, 그리고 학습 능력이 부족한 저학력 집단 등은 평생학습에서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는 집단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다. 평생학습 재정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평생학습에 드는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즉 재정지원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의무적 학교교육의 경우 정부가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평생학습의 경우 과연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담당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학습에 참여하기를 희망할 경우 대체할 인력이 필요하며 이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과연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그 비용을 회사가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가 저조한 것은 이들이 근무 중 학습을 받을 경우 인력을 대체할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을 위해 월급을 받으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학습을 위한 유급휴가제 등의 의무적 도입이 복지제도로써 거론되고 있다. 한편, 평생학습 참여의 촉진을 위해서는 성인학습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회사와 개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도 증대되어야 한다. 한편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집단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평생학습 재정지원의 중요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에 대한 매칭 펀드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인, 또는 회사가 평생학습에 투자할 경우, 회사 또는 정부가 이러한 평생학습 행위에 매칭 펀드 형식으로 공동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이같은 평생학습의 재정지원은 아직은 우리나라의 정책적 지원이 미약한 분야이다.

라. 정보와 진로 제공 및 평생학습 접근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학습 자체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이다. 사회 전반에 걸친 학습문화의 조성과 함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개인이 참여를 원한다고 해도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기관에서 제공되는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평생학습 참여가 촉진될 수 없다. 특히 저숙련 계층의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가 성인학습 결과에 대한 보상과 성인학습의 성과를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평생학습의 경우 초기 정규 교육에 반해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이 더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성인이 될 수록 조직화된 학습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평생학습의 초점이 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에 모여져야 한다.

마. 활용 및 인증

평생학습의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 또는 사회가 얻는 이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생학습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가 높아질 경우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는 자동적으로 증가되게 될 것이다. 즉 평생학습을 통한 지식 또는 기술의 향상은 무형의 자산이지만, 이것이 형태가 있는 것처럼 남에게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 즉 평생학습 참여 결과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직장에서의 경우와 같이 승진, 봉급 인상 등과 같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능력이나, 경험, 선행학습의 인정 등이 중요하다. 이같은 체제의 정비가 우리나라 경우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바. 평생학습의 질관리 및 전달체계 개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이 촉진되려면 국가의 전반적 평생학습 전달(공급) 체계를 잘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OECD 정책목표에서도 제시된 듯이 좋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찾아 제공하고, 평생교육 제공기관에 대한 질관리를 강화하며, 평생학습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성인교육 정책의 효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성인교육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며 어떠한 정책이 덜 효과적인가를 평가하여 성인교육정책에 대한 투자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의 모든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함과 동시에, 고용주 단체, 노조, 지자체 등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교육, 고용, 그리고 사회복지 부문 등 관련부문 간의 상이한 정책 목표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에 관한 서로 다른 부처 간 정책에 일관성이 있도록 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 부처 간에 조정도 필요하다.

〈표 3〉 OECD ‘성인학습의 주제별 고찰’ 연구에 따른 성인학습의 주요 정책영역과 정책목표

주요 정책영역	영역별 주요 정책목표
지식과 기술의 향상 및 사회경제적 참여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사회에 대비한 능력의 개발 - 주요 능력과 향후 필요로 하는 능력을 식별 - 모든 성인이 기초 직업능력을 가질 것 - 교육 내용을 시장이 필요로 하는 능력에 일치시키는 것 - 외국어 학습의 개선 및 ICT 능력의 개선 - 비경제적 목표의 학습 즉 개인의 충족, 시민 참여,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목표의 학습을 권장
불평등의 감소 (소외계층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교육(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청년층의 비율 축소 및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젊은 층의 축소 - 중고령층 근로자를 위한 평생학습전략 수립을 통해 긍정적 노령화를 지원 - 저숙련층, 불이익(소외)집단, 중고령자 집단에 대한 평생학습 정책의 집중 - 저학력, 저숙련 집단에 대한 근로자 현장학습을 확장
성인학습에 대한 투자 - 투자의 수준 - 재정지원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학습(계속교육훈련)에 대한 재정적 투자 제고 (공공 및 민간 모든 수준에서) - 회사와 개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 제고 - 평생학습에 대한 공동-투자(매칭 펀드) 제도를 도입
정보와 진로 지도/ 접근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이 모든 이에게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국가전반에 걸친 학습문화의 조성 - 성인학습에 대한 정보 및 진로지도의 제공과 상담 제도를 제고 - 저숙련층 대한 개인적 경력지도 - 학습활동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의 권장 - 성인학습의 경제적 비경제적 성과에 대한 인식 제고
활용 및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학습에 대한 보상 제고 - 지속적 능력개발의 사회적 성과와 개인적 성과에 대한 홍보 - 습득된 능력에 대한 가시화(예: 인증) - 능력과 선행학습의 인정
질관리 및 전달의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전략의 실현을 통해 국가 교육훈련체계를 선진화 - 교육체계의 각 부문의 전달방식을 최적화/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발견 - 전달 및 질 관리의 개선: 질 관리의 제도화 - 교사의 질을 개선/성인교육 정책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개선 - 모든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킬 것, 사회적 파트너와 협업할 것 - 서로 다른 정책적 목표들간의 균형 유지(교육, 고용, 사회복지 등) -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주요 부처 간의 정책적 조정 (타 정책과의 co-ordination이 필요)

자료: <Monitoring Adult Learning Systems with Indicators-지표를 통한 평생학습체계의 고찰>, OECD INES B 내부자료(2006).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에서 살펴 본 평생학습의 주요 6개 정책 영역 - 평생학습의 참여율, 평생학습 접근에 있어서의 계층간 불평등, 평생학습의 재정, 평생학습의 정보 및 진로 제공, 활용 및 인증, 평생학습의 질관리 및 전달체계- 모두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3. 직업능력개발 관점의 미비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또 하나의 주요 취약점 중 하나는 그나마 미약하게 이뤄지고 있는 평생학습 내에서도 직업능력개발적인 관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앞의 [그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선진국의 경우 평생학습에서 직업능력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OECD가 제시한 평생학습의 주요 정책 영역의 정책목표의 주요 항목들을 살펴볼 경우에도 이러한 직업능력개발 중심적인 사고가 평생학습 전체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평생교육이 능력개발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 대한 동의는 이뤄지고 있으나 평생학습 자체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같은 평생학습 내의 직업능력개발 관점의 미비는 평생학습의 촉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Ⅲ. 평생학습 체제하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1. 평생학습사회에서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

평생학습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의 지속성에 대한 인식이다. 한번 배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지속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배움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평생학습 지원제도와도 연결이 된 제한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는 배움 자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한번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배울 수 있고, 언제든지 배워야 하는 학습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 평생학습 속의 직업교육 요소 강화(buil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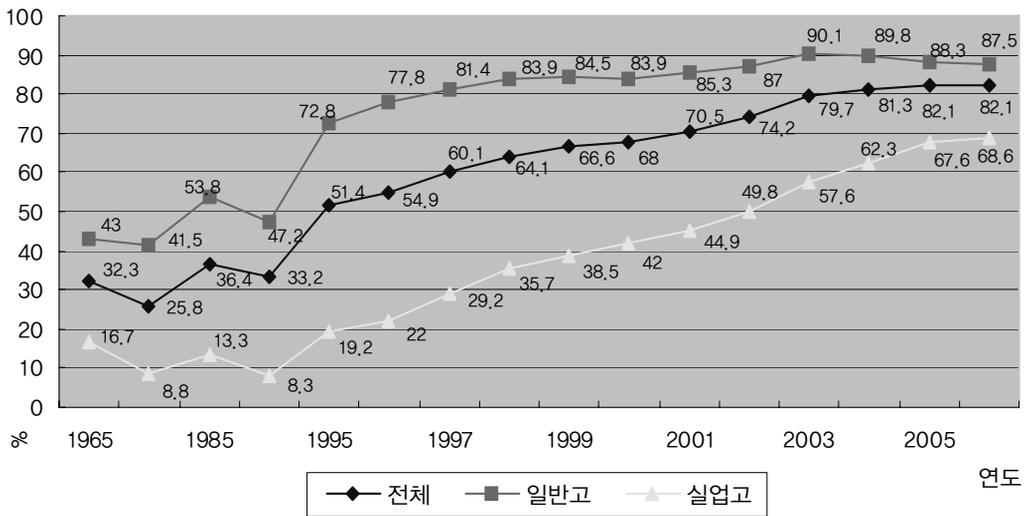
평생학습의 전반적인 진흥도 필요하지만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은 아직도 직업교육적인 요소가 너무나 부족하다. 학습 자체를 직업을 위한 것이기 보다 그냥 배움 자체로 인식하는 학교교육단계의 인식이 학교 후 단계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이제는 평생학습에서 직업교육의 핵심 단어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개인의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과정에 직업교육 요소를 필수화(built-in)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학습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초중고 단계는 이미 논의가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고등교육과 학교교육 이수 후의 교육 즉 계속교육에 초점을 두겠다.

2. 학교와 노동시장간 이행경로(transition pathways)의 개선

평생학습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는 학교와 일의 세계간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한번 배운 것이 평생을 가는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의 이행은 학습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며 이행 이전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워야 할 것이다. 현재의 평생학습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행경로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즉 평생학습 시대는 학교에서 일터로 그리고 일터에서 학교로의 이행이 자유로울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건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5년도 고졸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32.3%에 불과하였으나, 95년 51.4%, 97년 60.1%, 2001년 70.5%, 그리고 2006년 82.1%로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한편 이를 계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계고의 경우 65년에 43%, 95년 72.8%, 97년 81.4%, 2003년 90.1%로 90% 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같이 높은 진학률은 직업교육 기관인 전문계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 까지 10% 안팎을 겨우 넘나들던 실업계고의 진학률은 96년-97년 20%대, 98-99년 30% 대, 2000-2002년 40%대를 거쳐, 2006년도의 경우 68.6%까지 급증하여 전문 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림 2]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률 추이:1965-2006

그러면 이같은 고학력화가 청년층의 인적자원 활용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표 3>에는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1998년 IMF 위기를 기점으로 12.2%까지 높아졌던 청년층의 실업률은 2000년도에 이르러 7%까지 낮아지고 있으나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고 있다.

<표 4>에서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 추이에서 나타나는 것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청년층 전체 인구의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청년층 인구 vs. 전체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1997-2005 (단위: 천명,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청년층 (15-29세)	실업자 (실업률)	322 (5.7)	655(12.2)	574(10.9)	402 (7.6)	388 (7.5)	341 (6.6)	383 (7.7)	412 (8.3)	387 (8.0)
15세이상 전체	실업자 (실업률)	568(2.6)	1,490(7.0)	1,374(6.3)	913 (4.1)	845 (3.8)	708 (3.1)	777 (3.4)	860 (3.7)	887 (3.7)

주)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는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안착하기까지 노동시장에의 적응 문제 및 일과의 매칭 문제 등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높은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특징은 고학력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연령이 증가하고 이로 실업을 체험하는 연령층이 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경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청년층이 높은 학력을 통해 인적자원을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높아진 학력이 높은 취업률이라는 성과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은 사회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 양성한 고급 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같은 대졸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크게는 학교에서 일터로 그리고 일터에서 학교로의 순환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 볼 수 있다. 평생학습 참여율이 제고되려면 다시 말해서 성인이 된 후 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학교와 일의 세계간의 이행과정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단선형에서 회귀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청년층 이행에 관한 한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OECD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청년층 실업의 주요 원인이 고학력화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취업 시까지 걸리는 이행기간이 이전보다 길어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OECD, 2000).

한편 외국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경로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이행경로가 외국의 경우와 사뭇 다름을 볼 수 있다. OECD 국가의 연령대

별 교육 참여율을 비교할 경우 이러한 점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표 4>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세 이후의 취학률 추이가 다른 나라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5-19세의 학령기에 취학률이 매우 높고 특히 20-29세의 취학률도 상당히 높으나 30-39세로 연령이 높아지면 취학률은 급격히 낮아지며 40대 이후의 취학률은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반해 호주의 경우 15-19세 연령층의 취학률은 81.6%로 우리나라보다 낮으나, 20대, 30대, 4대 연령층의 취학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30대 연령층이 취학률을 비교할 경우 한국 1.9%, 호주 14.0%, 스웨덴 13.5%, 그리고 영국 15.6%로 상대적으로 주요국의 높은 교육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교육 참여 연령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표 5> OECD 회원국의 연령별 취학률: 2004 (단위: %)

구 분	호주	독일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3~4세 인구 대비 4세 이하 재적학생의 취학률	42.4	76.9	20.3	85.1	76.7	52.9
5~14세 인구 대비 5~14세 재적학생의 취학률	98.5	97.9	93.5	99.1	100.4	97.3
15~19세 인구 대비 15~19세 재적학생의 취학률	81.6	88.8	85.2	87.5	79.0	76.5
20~29세 인구 대비 20~29세 재적학생의 취학률	32.6	27.9	27.4	35.8	27.8	23.4
30~39세 인구 대비 30~39세 재적학생의 취학률	14.0	2.9	1.9	13.5	15.6	5.2
40세 이상 인구 대비 40세 이상 재적학생의 취학률	6.1	0.2	0.4	3.1	7.8	1.5

주: 1) 연령별 국·공·사립 교육기관의 전일제 및 정시제 재적 학생의 취학률임.
 2) 의무교육종료연령은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임. 예를 들면, 종료연령 18세는 18세 이하의 모든 학생들은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말함.
 자료: OECD(2006),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표 6>에는 의무교육이 끝나는 15세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교육참여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연령인 20세까지 각국의 교육기관 유형별 교육 참여가 제시되어 있다. <표 6>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행경로의 경직성을 단편적으로 보

여주는 실례이다. 우리나라는 18세, 19세, 20세 연령대의 고등교육참여율이 각각 57%, 69%, 64%로서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의 고등교육참여율을 보여준다. 또한 이 표에서 나타나는 것은 경로의 획일성이다. 한편 비교대상인 호주의 경우 18, 19, 20세의 고등교육 참여율은 각각 38%, 35%, 37%에 불과한 반면, 18, 19, 20세의 중등교육참여율은 38%, 25%, 20%로 18-20세 연령의 교육 참여자가 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편차는 있으나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각 연령대에 취학인구가 중등교육기관, 중등 후 비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표 6> 교육단계별 15~20세 인구의 이행 특성(2004) (단위: %)

구 분		호주	독일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후기 중등교육 졸업 연령		17-18	19	17-18	19	16-18	18
15세	중등교육	98	98	95	99	102	97
	중등교육	93	97	98	97	94	92
16세	중등 후 비 고등교육	n	n	a	n	x(2)	m
	고등교육	n	n	n	n	n	n
17세	중등교육	80	91	93	97	81	83
	중등 후 비 고등교육	1	n	a	n	x(5)	m
	고등교육	4	1	2	n	2	3
18세	중등교육	38	83	12	94	38	21
	중등 후 비 고등교육	3	n	a	n	x(8)	m
	고등교육	26	3	57	1	23	36
19세	중등교육	25	42	1	29	23	5
	중등 후 비 고등교육	3	18	a	1	x(11)	m
	고등교육	35	10	69	13	32	45
20세	중등교육	20	20	n	19	18	1
	중등 후 비 고등교육	3	14	a	1	x(14)	m
	고등교육	37	18	64	24	34	46

주: 인구 자료와 학생/졸업생 자료 간의 적용 범위의 불일치로 인하여 학생 순유출국가의 참여율/졸업률은 과소 추정되고 학생 순유입국가의 참여율/졸업률은 과대 추정되었을 수 있음.

자료: OECD(2006),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교대상인 국가들이 같은 연령대에 중등교육, 중등교육 후 비 고등교육 등과 같은 경로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연령대의 교육 참여가 고등교육기관에만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이행 경로의 경직성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해외 국가들의 이행경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입학이라는 획일적인 경로는 대졸자의 양산으로 인해 대졸자가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쉽게 표현하면 차선의 수가 동일한 도로에 차가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정체가 일어나는 현상에 비교할 수 있다.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수가 늘어나 통행량이 늘면 당연히 정체현황이 나타나 교통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급격한 고학력화로 인한 청년층 실업의 문제도 이에 비교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행경로의 다양화를 통한 학교에서의 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경로(school-to-work)의 개선

먼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경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무조건 대학 진학이라는 경로에서 벗어나서 학교 재학 중 그리고 졸업 후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일체험을 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여실히 낮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체험을 하고 진학하는 이의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한편 재학 전후의 일체험은 취업 후 취업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밝혀진바 있다. 따라서 재학 중의 일체험은 물론 졸업 후 진학이라는 획일적인 경로가 아니라, 졸업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고 자신의 적성을 보다 발견할 기회가 있도록 경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졸업 후 즉시 진학을 하게 되는 ‘학교에서 학교’(school-to-school)로의 이행경로 외에도, 졸업자가 졸업 후 일터를 경험하게 되는 학교에서 일터로(school-to-work)의 경로를 개발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다.

□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경로(school-to-work)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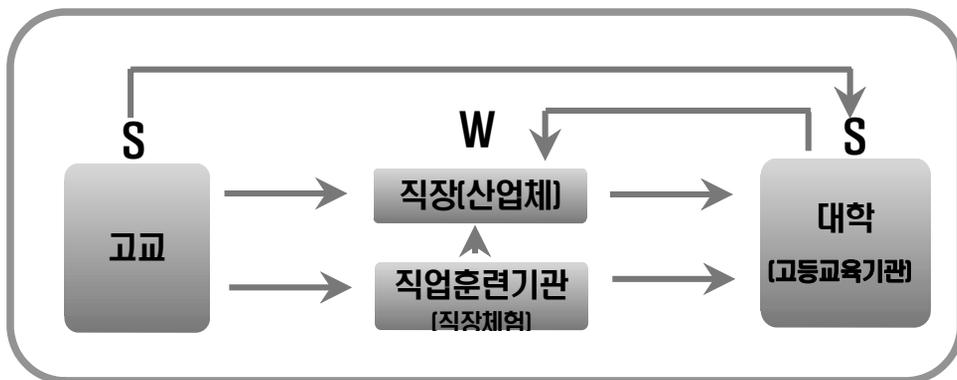
한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school-to-work 경로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일터에서 학교로의(work-to-school) 경로의 촉진이 필요하다. 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필요한 경력을 쌓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학교로 돌아오는 경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로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일터→학교로의 순환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능력개발 제도가 work-to-school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재직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학습기회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자원의 공급은 재직자의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 활성화의 주요 전제조건이다. 예를 들어 유급 및 무급휴가제 등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제도, 고용보험기금 등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제도의 활용은 재직자의 학교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나영선 외, 2006;이기성 외, 1999).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능력개발은 일터에서 이뤄지는 비정규적 형태의 학습뿐 아니라 일터 외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뤄지는 학습도 중요하다. 한편 사내는 물론 외부교육기관에서의 학습결과를 기업이 인정해 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또한 기업에서의 경력과 경험을 학교가 인정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평생학습제도는 개인의 모든 학습이 인정됨으로서 개인의 학습이력에 반복이나, 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가 개인의 기업 경력을 인정하거나 우대해 줌으로써 work-to-school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졸업자를 위한 이행경로의 개선은 school-to-work(학교에서 일터로 가는 경로)의 촉진과 work-to-school(일터에서 학교로 돌아가는 경로)의 촉진 모두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학교[S]⇒일[W]⇒학교[학교]로의 경로

3. 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 사회가 구현되기 위한 주요 과제의 하나는 대학의 기능이 현재와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발표한 논문들에서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 기능 강화가 논의되어졌다면 여기서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다.

가. 대학의 평생 직업교육기능 강화의 배경

대학 설립 자유화와 함께 대학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학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적령기 인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대학은 교육대상 측면에서 평생교육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평생학습의 도래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기능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평생학습시대의 도래에 따라 대학이 전통적인 학령기 대상의 교육 수요를 소화하는 기관에서 졸업 후 학교로 돌아오는 소위 ‘work-to-school’ 성인의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변모하게 된 것은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에 따른 대학의 기능의 변화로서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1)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

<표 7>은 고등교육의 환경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제시해주고 있다.

<표 7> 고등교육의 환경변화

Lynch(1982)	Knapper & Cropley(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부족에 따른 재정 압박 - 개인의 취업 욕구와 산업계의 요구에 대한 고등교육의 충족 미흡 - 경제·산업의 변화에 대한 고등교육의 대응력 부족 - 지속적인 청년 실업과 이 문제의 해결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의 능력 미흡 - 계속되는 사회적 불안과 청소년의 일탈 증가 현상에 대한 고등교육의 대응 필요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교육 방법(재택 학습, 인터넷 학습 등)의 출현 - 직업 세계의 요구 변화: 기존의 직무수행 능력이 노후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주기적인 재훈련 필요 -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대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직업 경로 발전 - 재택 근로 - 교육 수요자 변화: 특히 직업의 변화와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 성인 학생의 증가

2) 우리나라 대학의 환경변화

□ 인구구조의 변화와 대학의 입학자원 감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률은 2005년 기준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OECD평균 1.6),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노동부, 2006) 또한 2018년 65세이상 인구가 전체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2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8〉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15~24세	7,697	6,908	6,468	5,547	4,266	3,235
25~49세	19,816	20,661	20,428	18,395	15,763	10,295
50~64세	6,189	7,102	8,956	11,897	11,863	9,225

자료: 통계청, 2005년

이같은 배경에서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지 않는 한 구조적인 인력부족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편 현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5%로 OECD 평균 60.4%에 비해 낮으며,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7년 49.0% → '00년 45.4% → '05년 44.6%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인구추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입학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표 9〉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입학자원의 지속적인 감소추이

(단위 : 명)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9	2010
고졸자	671,614	764,712	736,171	670,713	593,643	602,908	598,958	623,843	693,216
대학+ 전문대정원	505,833	657,728	658,678	668,436	671,900	671,900	671,900	671,900	671,900
탈락자	165,781	106,984	77,493	2,277	△78,257	△68,992	△72,942	△48,057	21,316

주: 1) 대학정원은 4년제대, 교대, 산업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모두 포함.

2) 전문대정원은 전문대, 기능대, 기술대, 2년제 각종학교 모두 포함.

3) 대학정원은 2004년도 이후 동결을 전제로 함.

4) 탈락자는 고졸자에서 대학+전문대정원을 뺀 수치임.

자료: 연합뉴스(2002. 10.16)

이같은 배경에서 고등교육 공급의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입학자원 감소에 따라 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대학은 성인들을 학생으로 수용해야 하는 문제와 동시에 재정 압박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비전통적인 학생을 모집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비전통적인 학생’(non-traditional students)에는 성인 근로자, 노인계층, 여성계층, 취약계층 등이 포함된다. 한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 전체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50% 정도가 25세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OECD, 2002), 호주의 경우도 South Australia에서 고교 이후의 교육을 받는 학생 중 50%는 성인 인구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밖의 국내 상황은 이같은 고등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보다 더 나은 직장 또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학교로 돌아오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고등교육기관이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나.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한편 대학이 이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대학의 기능변화가 필요하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학교육이 상아탑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의 생존전략으로서 인력양성 수준, 대상 및 분야별 특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전문대학과 대학의 미충원율은 심각하여 대학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전문대학 미충원율('05)은 수도권 3.1%, 지방 26.2%이며, 대학 미충원율은('05): 전체 8.9%(전남 33.9%, 강원 21.5%, 광주 19.8%, 전북 17.5%) 이에 따라 전국 대학을 특성에 따라 기능과 소재지별로 연구/교육/직업교육중심으로 구분 및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의 기능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 2005)

1)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의 필요성

한편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혁신이 필요하다. 대학은 평생학습기관 중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이나 실제로 대학이 제공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는 매우 저조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표 10>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학이 제공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선호는 매우 높으나 대학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평생학습의 제공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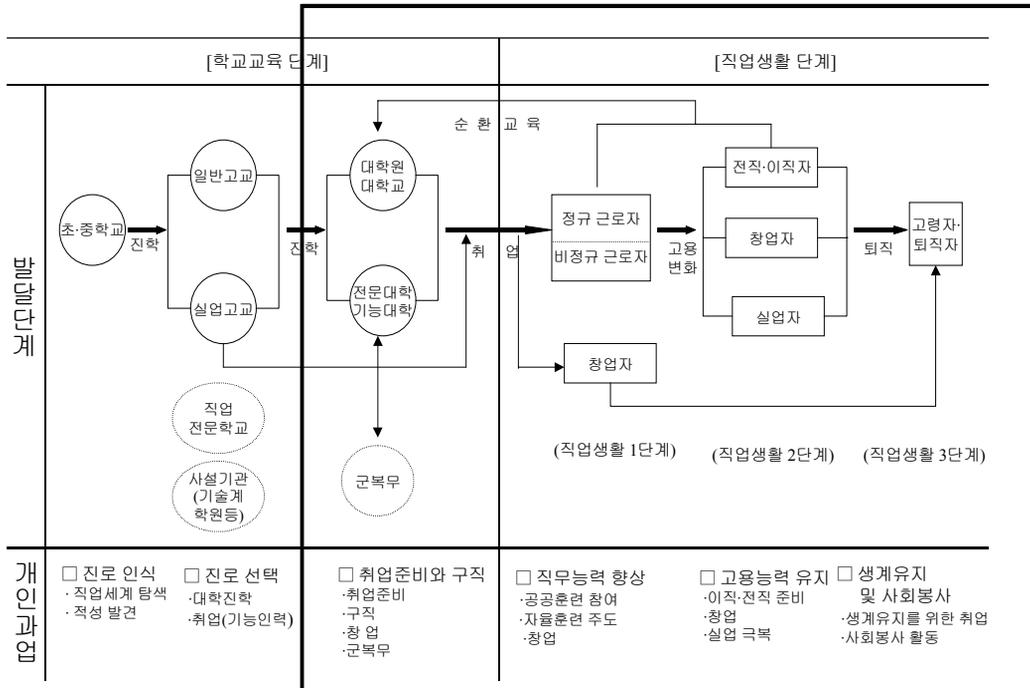
<표 10> 참여 교육훈련기관과 향후 희망 교육훈련기관 (단위 : %)

구분	사내훈련	기업 부설기관	산업교육 전문기관	대학	민간훈련 기관	공공훈련 기관	기타
'05년 훈련받은기관	24.2	10.0	11.2	3.3	17.1	6.6	27.5
희망 훈련기관	11.6	8.2	18.2	18.6	15.3	21.1	7.1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대학이 평생학습시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지적되는 요소로서 대학 : 지역·산업의 현장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을 들고 있다.(대학교육 경쟁력은 60개국 중 54위(IMD, '06))

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는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의 전문(기능)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취업으로, 그리고 졸업 후 각 직업생활 단계에서 학교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각 수요 집단의 수요에 맞는 평생직업교육 제공이 기본 방향이다.



[그림 4] 생애 경력발달 단계와 직업능력개발 과업

자료: 정태화(2006), '직업능력개발 중심으로의 평생교육제도 개선', KRIVET 총서

직업생활단계에서 정규와 비정규 근로자, 전직 및 이직자, 창업자, 실업자, 고령자 및 퇴직자 등 취업상태, 연령집단, 소외계층 등 평생직업교육의 대상 집단(target group)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필요하다. 평생에 걸친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시대에 지식기반을 갖춘 대학이 평생교육 공급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당위성 존재한다.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대학이 개인의 평생직업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의 방향

이에 따른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단계별 근로자의 평생학습 요구 지원(재직자 및 근로자)이 필요하다. 둘째, 취약계층 등 사회변화, 노동시장 변화, 양극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계층의 평

생학습 요구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대학의 정규과정 및 비정규 과정에서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그리고 대학이 지닌 각종 시설과 제도를 활용한 개인의 평생학습 기회 지원 및 평생학습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가)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기능 강화

먼저 대학의 정규 과정 내에서의 평생직업교육 강화는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 및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한다.

첫째, 산업체 근로자의 고등교육참여 및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한다.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 학과제도 등 적령기 학습자의 학업과 취업의 동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평생학습기회 부여한다.

다음으로 시간제 등록제도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가정주부, 직장인, 소외계층 등 성인을 대상으로 시간제 등록제의 활성화시킨다.

셋째로, 전문대학 졸업생의 학위취득기회를 확대한다. 전문대의 전공심화과정 운영 등을 통해 전문대학 졸업생이 희망할 경우 취업 후 학교로 복귀해 학위 취득이 용이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넷째, 대학 정규과정 내 성인학습과정의 설치한다.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 학과제도 등은 주로 적령기의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편 중장년층 성인의 경우 정규과정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고등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규과정 내에 성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성인의 학위 취득기회 확대한다.

이 밖에도 정규과정에서 대학의 평생 직업교육이 강화되려면 대학 자체의 직업교육 기능이 강화되어야 성인의 평생교육을 유도할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규과정에서 현장실습, 인턴십 제도 등 현장성이 강화되도록 교육과정 제도개선을 통해 성인의 대학교육 참여 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 비정규 과정에서의 기능 강화

대학의 비정규 과정 내 평생직업교육 강화는 각 집단별로 자아실현과 직업능력개

발기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전직자, 이직자 등 재직자와 비재직자를 위한 과정을 제공하되 대학의 지식기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학이 비교우위를 가진 과정 중심으로 제공한다.

첫째, 대상 집단(target group)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먼저 정규 및 비정규 근로자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맞춤형 향상 교육,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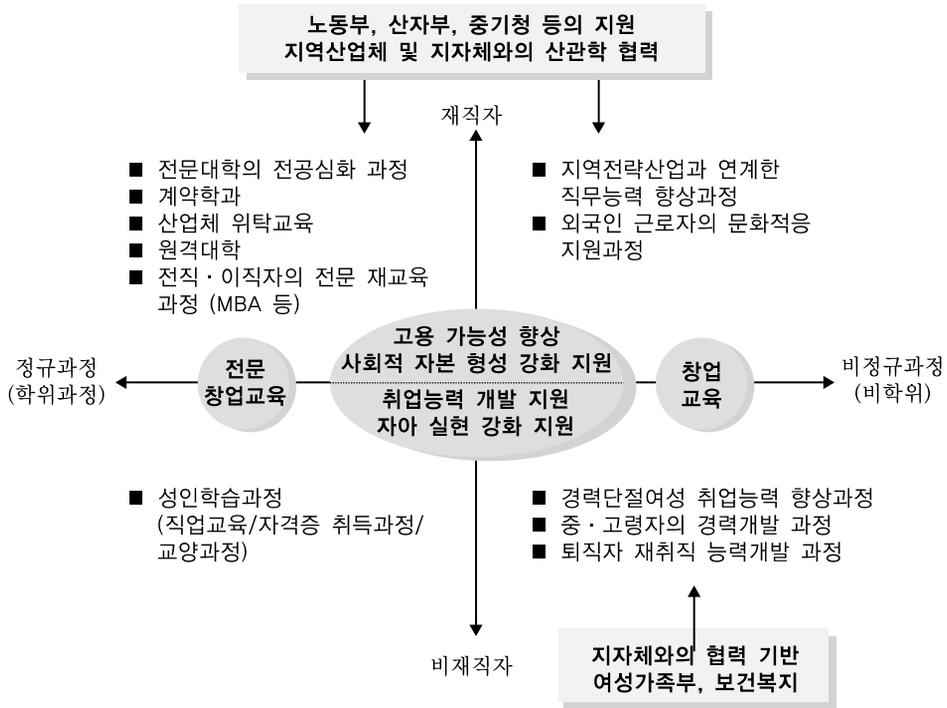
다음으로 전직자, 이직자, 실업자를 위한 향상훈련과 재훈련으로, 창업자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퇴직자(퇴직 공무원 포함)의 재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고학력 중고령자를 위한 Career Path용 프로그램 운영(사회복지사, 노인건강 트레이너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문화 적응 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정규과정에서의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 비정규과정에서 이수한 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
- 학교 내에서 비정규 과정과 정규 과정의 연계 강화: 평생교육원 등 비정규과정에서 이수한 과정의 학점을 관련학과의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
- 비정규교육과정에서 자격 취득과정의 활성화
- 비정규교육과정에서 블렌디드 러닝 과정의 활성화(이러닝과 집체교육의 혼합 과정을 통한 자격 취득)

다) 대학의 정규 및 비정규 교육 과정에서의 기능 강화

대학의 정규, 비정규과정에서의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는 개인의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재직자와 비재직자를 위해 각 집단별 특성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 평생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 모형

[그림 5]는 대학의 정규, 비정규 과정을 통한 평생직업교육기회 제공을 재직자와 비재직자를 위한 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재직자를 위한 정규과정에서의 평생 직업교육 제공은 제2사분면에, 재직자를 위한 비정규과정에서의 제공은 제1사분면에, 비재직자를 위한 정규과정에서의 제공은 3사분면에, 그리고 비재직자를 위한 비정규 과정에서의 제공은 4사분면에 제시되어 있다.

재직자를 위한 대학의 정규, 비정규 과정에서의 평생교육 제공의 초점은 고용가능성 향상과, 사회적 자본 형성 강화 지원에 두어져야 하며, 비재직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 교육 제공의 초점은 취업능력 개발지원과 함께 자아 실현 강화에 두어져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직자를 위한 과정들과, 비재직자를 위한 과정의 제공은 지역산업체 및 지자체와의 협력과, 타부처와의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함을 표시하였다.

4. 평생교육 지원체제 개선

마지막으로 평생 직업교육의 전반적인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평생학습의 시대는 도래 하였지만 앞의 II장의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취약성’을 통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학습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며 특히 평생 직업교육을 위한 지원체제는 더욱 더 미비된 상태이다. 평생교육의 지원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II장에서 살펴본 평생교육의 측면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 중 주요한 측면들을 다시 한 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평생학습 전달 기능의 강화

□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질관리 체계화

먼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잠재적인 수요를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과정과 프로그램을 질 높게 제공할 경우 평생 학습에의 참여가 제고될 수 밖에 없다. 대학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이 지역 주민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개발해 나간다면 평생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동시에 평생교육대한 성인의 수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관리 체계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대상, 직종 등에 대한 명확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지역 학습자 및 지역산업체 대상), 해당 직종 중심의 직무분석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프로그램 내용 및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 단계별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평생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

평생학습 전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경우 적절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교원

의 질 또한 우수하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평생교육 담당 교원은 관련 산업체 전문가를 비롯하여 산업별 퇴직자, 명퇴 및 조퇴자 등의 경력전문가들을 활용함으로써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동시에 평생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와 연결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

평생학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과정의 운영이 이뤄지는 것이 필수이다. 지역의 수요와 지역 산업체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학습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의 평생학습 참여와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이다. 또한, 지역 산업체와의 산학연계를 통하여 지역 산업체 근로자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기반의 산업체가 요구하는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의 취업능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나. 평생학습의 활용 및 인증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성 있는 지식의 제공, 정보의 제공과 함께 평생학습의 결과에 대한 인정을 통해 학습내용의 중복과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선행학습의 인정이다. 학습자가 학교 외 또는 방학 중 자신의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학습 결과(자격 취득, 연수 참여,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정규교육기관이 인정하고 또한 기업이 인정해주는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업에서의 사전 경험을 인정해 주는 체제가 필요하다. 현장실습, 인턴십, 현장 경험 등 경력을 인정하고, 입학 자격요건 등에서 선행학습 및 경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경험과 자격의 인정이다. 대학의 비정규과정 외에, 기타 직업능력개발기관에서 이뤄진 학습들에 대한 인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국 평생교육기관간의 수평적 연대의 강화를 의미하며 동시에 교육기관과 산업체의 연대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기관 및 산업체에서의 교육훈련

경험을 산업체가 인정하고 반대로, 산업체에서의 일경험과 교육경험을 정규교육체제 내에서 인정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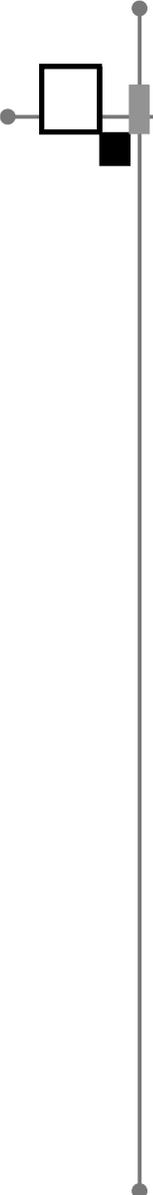
다. 행재정적 지원책 강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재정은 매우 취약하다. 또한 기업의 경우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평생학습의 직업교육기능 강화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 부처 및 지자체의 필요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가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범부처적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노동부, 산자부, 정통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주관 하에 다양한 대상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범부처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나영선 외(2005), 직장내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영선 외(2006). 평생직업능력개발 시스템 혁신 방안. 대통령 자문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
-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5),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 이기성 외(1999). 평생학습 기회확대를 위한 유급·무급 휴가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지선 외(2003). 단기 성인학습과정 도입에 따른 전문대학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지선 외(2002).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태화 외(2004), 직업능력개발 중심으로의 평생교육제도 개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지희·장명희(2006),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정책자료(미발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David Istance(2002), “Schooling for the Future-Trends, Scenarios and Lifelong Learning”, OECD Programme on Educational Building: International Seminar on Educational Infrastructure, Working Paper, CERI,
- OECD(2004), Lifelong Learning, Policy Brie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 OECD(2002), The Financing of Lifelong Learning,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
- OECD(2000),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Making Transitions Work,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지 정 토 론

- **중등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토론**
 - 강연홍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정책보좌관)
- 『중등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 임정희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관)
- **대학에서의 직업교육 관련 토론문**
 -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
 - 양한주 (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
- **평생학습체제에서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 김성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지 정 토 론

중등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토론

강 연 홍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정책보좌관

지 정 토 론

중등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토론

강 연 흥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정책보좌관

정철영 교수님의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한 발전 방향에 관한 발표는 최근에 범정부 차원에서 고교단계 직업교육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시점에 매우 시의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입학정원미달 등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중앙정부나 교육청 등에서 여러 대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참여정부에 들어서 직업교육혁신방안을 발표(2005)하였고, 올해에는 국가의 미래전략으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을 발표하면서 핵심전략 7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전문계고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정부부처가 대폭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전문계고 활성화 전략이 수립되었다. 아마 해방 이후 전문계고(실업고)에 대해 각 부처가 직접 참여하여 예산과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경우는 처음일 것이다. 정권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종합적 혁신방안은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지만 반대로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반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교육분야의 전문가나 교원 등 구성주체들의 경우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여 미래전망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자료는 전문계교육의 전반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계고교의 성격 및 목적, 체제 및 운영, 학교의 규모, 전문계고교의 인적자원, 관련조직체계 및 예산 등에 대해 잘 다루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면 정부의 정책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II장의 성격과 목적에서 발표자는 진학과 취업의 논리 모두 타당하지만 전문계고등학교는 졸업후 바로 진학보다는 취업후 계속교육을 받는 방식(Work to School)이 중시되어야 함과 전문계고를 졸업한 후 취업과 동시에 전문대학 진학형태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문호는 지나칠 정도로 확대되었고, 학생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진학에 대한 지속되는 한 진학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계고의 성격과 목적을 취업과 진학 병행으로 설정하게 되면서 단위학교서는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별 특성에 적합한 학교교육의 목표 설정과 운영체제를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계고 졸업자의 대학진학이 노동시장에서 일반계출신 졸업자에 비해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실업계고 교 교육은 성공적인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노트03-10)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이 뚜렷한 목표나 비전 없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취업지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발표자는 서울여상의 사례를 들어 성공적인 진로지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계고의 진학은 주로 전문대학위주(63.2%, 2006년)이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전문계고와 전문대학졸업자의 의미 있는 임금차이가 없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III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체제의 다양화 방안에서 진학을 위한 대학준비교육기관으로 산업과학고등학교를 제안하고, 이를 위해 동계대학 입학시 특례입학을 허용토록 정책지원을 하여 전문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고의 경우처럼 전공분야의 전문성교육이 영재선행교육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학문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통합형고나 전문고 등에도 정책적 지원사항으로 대학입학시 가산점이나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전문계고의 본질인 직업교육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대학측에서 인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전문계고를 나와 취업을 한 상태의 졸업자들이 진학을 원할 경우 행정지원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여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지원사업은 각부처가 같이 참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연구학교 운영사례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래상태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학교별, 지역별, 영역별 특성에 맞게 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어야하고, 학교가 그만큼의 사회적 생산성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분석, 평가수단의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역교육청 및 각 연구기관이나 학회 등은 책임감을 갖고 후속조치를 취할 때 보다 장기적인 전망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V장의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한 규모에서 밝힌 인력수요와 교육수요에 대한 견해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부실한 학교는 과감히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적정규모를 설정하여 학교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핵심/ 특성화 산업계획에 따른 인력수요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상시수급전망 및 노동시장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곧 신설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개발본부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장에서 다룬 전문계고교의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의견도 매우 설득력이 있다.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상담교사배치 우선순위를 전문계고교로 하였다. 교원의 양성임용관리체제 역시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영역과 교과,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적 변화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발표자께서는 우수학생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방안과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전문계고는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경제적 곤란을 겪는 학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소외,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복지 차원의 접근을 제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 전문계고교 교장들과 교사들이 겪고 있는 혼란가운데 하나는 우수학생유치를 통해 대학진학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신입생 홍보를 하여 학교경쟁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문계고교의 성격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전문계고교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전문계고교는 단계적으로 보면 보통시민교육으로서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측면과, 생산성을 가진 인적자원으로서의 전문교육·훈련이라는 직업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는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그리고 사회자본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계 고교가 일반 고처럼 대학입시를 가지고 경쟁하려 목표를 세우는 것은 분명 잘못된 목표이다.

교원의 경우 연수 지원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대상화시키기 보다는 그들이 주체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체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원에 대한 전략 역시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 속에서 풀어가야 할 것이다. 보통교과교원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교육부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 교육청은 전문계고의 보통교과교사에 대한 별도의 연수 등 지원 계획을 만들 것이다.

정철영 교수님 발표 중 가장 의미 있는 핵심적 제안은 VI장에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전문계고교 정책이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가질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전문가조직이나 정부내 조직이 거시적 관점에서 구체적 사안까지 整合性을 갖지 못하고 상호 체계적 소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조직은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실천적이고도 실제적인 네트워크를 상시 가동시키고, 민간의 각종 단체나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학교의 구성원들이 협의체수준을 넘어 보다 강한 조직력을 갖는 단일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 영역의 체계화 후 횡적으로 소통하는 관계 구조가 될 때 비로소 장기적 전망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예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전문계고교도 급별 이유로 지방 이양 논리에 따라 계속 줄어들다가 완전 이양되어 버림으로써 지역교육청의 전문계고 예산은 상당히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있지만 안정적인 확보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결국 직업교육 예산에 대해 지방화의 논리를 극복하고 다시 중앙정부 예산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선 명분과 논리적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결론에서 강조하신바와 같이 전문계고교 혁신을 위해서는 국가, 교육청, 학교가 각각 노력을 해야 하지만 민간, 전문 연구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가능하다. 발전위원회의 상설화 제안도 아주 중요한 제안이므로 담당과에서는 사업꼭지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특히 민간에서 미국의 직업기술교육학회(ACTC)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병행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추진의 중심주체를 형성하고 조직구성 후 사무처(국)로 상설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국가적 지원만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없다. 권한도 이미 다양하게 분산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한정된 인원으로 그 많은 정책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발표자께서 전문계교육의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이 논문은 향후 발전 방안을 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좋은 논문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약간의 소견을 더하고자 한다.

전문계 고교의 외형적인 모습은 시대조건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변화의 계기가 외부적 영향력에 의해 대상화되어왔다는 것이다. 전문성과 열정으로 장기적인 전망(로드맵)을 만들고 구성주체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의 영역 이해 등이 있을 수 있다면 과감히 털어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하지만,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전망에 근거를 두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때 교육내용이나 과정의 조합이 가능해지고, 교육의 방법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교육의 질적 수준 미흡으로 인한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와 직종별 수급 불일치(jobmismatch)를 지적하곤 하지만 이는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교육·노동시장 정보의 수집 분석체계를 확립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서의 교육성과를 평가할 시스템의 구성과 평가지표개발, 평가 전문인력 확보,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으로 구조개혁을 끌어내는 장치 등은 중앙정부와 연구기관,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학교에서 교육시킨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학

교체제의 효과성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진다면 학교에서도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할 “핵심적 능력”을 구체화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실증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직업기초능력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스며들지 않고 예전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연수를 아무리 강조해도 기존 방식의 전문교과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특성화를 아무리 강조해도 막상 질적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지식기반 경제하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측면에서의 전문계고교 교육은 다면적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 예민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학생들이 처한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고려한 교육방법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지식근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태도나 핵심적 특성을 키워 부가가치를 갖는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모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품성과 전문적 역량을 가진 자원으로 성장해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것이 곧 교육복지이고 인적자원개발일 것이다.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 정 토 론

『중등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임 정 희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지 정 토 론

『중등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임 정 희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직업교육학회를 통하여 각계에서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등직업교육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됨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직업교육학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토론의 내용은 발표자의 논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I. 서 론

발표자께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 및 국책연구소 차원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관한 연구와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자체 연구 및 종합대책 마련과 매년 단위학교별 학교발전계획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이를 학교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금년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우리 시 직업교육 발전 방안 마련과 특성화 추진을 위한 컨설팅 을 의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전문계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논의점으로 발표자님께서 언급하신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 및 목적, 체제 및 운영, 규모, 인적자원, 조직체계 및 예산 등 5가지 외에 재정경제부의 2+5 정책과 맞물려 가장 중점을 두고 노력해야 할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문제 즉 졸업생의 취업 지도와 부적응 학생 추수지도 문제 등을 추가로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II.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 및 목적

-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 및 목적을 ‘취업’, ‘동일계 진학’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진학을 희망했으나 취업으로, 취업을 희망했으나 진학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진학 위주, 취업 위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논의사항으로 전문계 교육을 취업위주의 중국교육으로 간주하는 것은 교육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이며, 기술과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계속교육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나 전문계 고교 교육은 기능 위주의 교육으로 경제 발전의 수단이 되어 취업 위주의 교육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증가한 이유는 학부모의 경제력 향상과 학벌 선호와 체면 중시 풍토 등으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 전망과 직업교육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 전문계 고교 교육이 졸업 직후 진학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취업 후 계속교육으로서의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전문계고-직장-대학을 연계하는 순환적 교육체제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취업 후 필요에 의하여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 졸업 후 반드시 다시 근무가 보장되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예를 들어 전문계 고교에서 자동차과 졸업 후 동일계 대학 진학한 경우와 인문계 고교 졸업 후 대학 자동차과를 진학한 경우 사회 역할 공헌도에 관한 추적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대학졸업자와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봉급차를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4년간만 차이를 두고, 승진과 대우 등에서 차별이 없을 때에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진학보다는 취업 후 계속교육으로서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산학협력 취업 약정제 사업 등에 의한 인력양성은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며,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청 단위에서, 또는 학교단위에서도 협약을 통한 취업약정사업은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주시청과 지역 산업체, 한국폴리텍 V 대학과 협약을 통한 맞춤형 취업약정사업을 개발하여 앞으로 3년간 지속사업으로 1년에 5억원을 확보하여 120여명의 학생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과 대학 진학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공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서울여상의 우수사례의 경우 과연 취업 쪽으로 유도한 것이 국가와 개인의 행복에 공헌할 것인가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상위의 학생을 동일계 대학으로 진학하게 한 것보다 취업 쪽으로 유도한 것이 우수사례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되 계속교육의 문호는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Ⅲ. 전문계 고등학교의 체제 및 운영

1. 체 제

- 전문계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방안에서 전문계 고교 체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사 양성대책 수립과 기존교사의 재교육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부전공 연수에 지원되는 예산과 그 성과는 무엇이며, 평가 데이터와 실적 결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졸업생에 대한 최소한 5년간의 진로 결과 평가가 병행되어진 이후 새로운 체제가 도입되어 전문계 고교의 다양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산업과학고등학교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전문계 고교를 따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실적으로 특별하게 따로 신설하는 것은 좀더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전문계 고등학교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나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간에 1학년을 마친 후에 2학년 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호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운영지원

- 산학협력취업약정제(협약학과 사업)가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산업체 필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사가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체 인사가 학교 내에서 일정기간 강의할 수 있도록 교환 근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부부처 위탁 지원 운영은 관계부처가 국가 차원에서 육성산업 및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육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생각하며 정부부처 위탁 지원 결과 취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가 병행되어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력 양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각종 공모제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에는 더욱 활성화 되어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와 차이가 발생되어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예산이 지원되는 관계로 장학에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IV. 전문계 고등학교 규모

2. 적정규모 설정 관련 고려할 요인

가. 인력 수요

우리나라가 어떠한 산업을 육성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미래 전체 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특성화 고교 비율이 산출되어야 함은 물론, 각 시·도의 산업 인력 육성 전망이 선행된 각 시·도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 교육 수요

- 학령인구는 우리 시의 경우도 2010년까지는 일시적 증가가 있으나, 2012년 이후에는 크게 경감하여 전문계 고교생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중장기 계획에 의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매년 신입생의 모집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수학생 진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논의 및 종합

-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종합적인 연구를 통한 적정 규모가 설정되고 적극적인 정책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단위학교별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교육청 단위에서 지역 전체는 물론 단위학교별 컨설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V. 전문계 고등학교 인적자원

1. 학생

-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전문계 고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바람직한 정책이며, 또한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계 고교 교사들의 리더십 연수 및 생활지도 관련 연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교 부적응 학생의 감소는 우리 사회 부적응 국민을 감소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예산 투자로 중도탈락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교사

- 전문교과 교사 양성의 문제점을 실험실습지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부족과 산업체 현장경험의 기회 부족, 전공교과 편성의 비합리성을 지적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교과 교사 신규 임용 시 이론시험으로만 채용하는 것을 반드시 실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신규 임용 후 반드시 산업체에 6개월 이상은 파견 근무를 의무화하는 체제가 필요하며 학과개편이나 체제개편에 따른 교사들의 실질적인 연수를 위한 휴직 인정과 필요 자격 취득 의무화 체제가 필요합니다.
-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기계금속, 건설, 디자인·공예의 임용고사에 필기고사 이외에 실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예고하였으며, 특성화 개편에 따른 교사 금형분야와 광관련 분야 교사 2명을 6개월 산업체 파견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전문계 고교 보통교과 교사의 관리 및 지원 그리고 연수가 수반되어야 함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보통교과 교사의 직업교육 이해 및 리더십 교육, 교수 학습방법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Ⅵ. 전문계 고등학교 관련 조직체계 및 예산

- 직업교육 관련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상태에 따라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특히 재정이 열악하여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계 고교 감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중장기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중 일정비율을 직업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그러나 시·도교육청 평가 시 전문계 고교 관련 예산 확보 부분에 배점 상향 조정은 더욱 양극화가 극심해질 우려가 높으므로 좀 더 신중해야 하며, 단순한 총 예산 확보액만의 비교를 지양하고 정책적 사업 분야의 예산 내용 비교와 예산 확보를 위한 자구적 노력면의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문계고 예산 반영 실태에 대한 중점감사 착수 및 실태조사 실시는 각 시도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Ⅶ. 결 론

- 전문계 고등학교 혁신과 개선을 위하여선 국가 성장 동력과 연계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및 산업체, 연구기관과 연계한 협의체

- 를 구축하고 상설화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 행정이 우선 인기에 부합할 경우 소외되기 쉬운 직업교육을 위하여 전국 교육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청사진과 이에 관련한 연수가 필요하며 또한 사립학교 이사장의 시대 변화에 따른 학교 정책 변화 유도를 위한 연수 기회 제공 등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단위학교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교육청 단위에서의 지속적인 워크숍 개최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현장 교원의 변화 유도 및 단위학교 컨설팅 지원과 지역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지역경제인포럼에 학교장 및 전문직들의 참여 기회 제공, 산업체의 경영 마인드 접목을 위한 학교장 중심의 연구회 운영 등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모두의 진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산업체와 연계한 취업 기회 확대 및 지자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취업 후 진학 등 진로 지도가 내실화되어야 하며, 취업률 높은 학교 유공교사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와 창업마인드 형성을 위한 학교기업 육성을 위한 종자돈 지원 등 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질 수 있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직업교육 정책 방향에 맞는 목표와 비전으로 직업교육 체제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정책담당자는 적어도 3년에 3개월은 전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현장에 맞는 직업교육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 정 토 론

대학에서의 직업교육 관련 토론문

이 호 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지 정 토 론

대학에서의 직업교육 관련 토론문

이 호 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1. 대학 교육의 현주소

(1) 수급불균형과 질적불일치

- 고학력자는 초과 공급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전문인력 양성은 취약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지식기반화를 저해
- 또한 대학교육이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Skill-mismatch, Job-mismatch 등 초래
- 한편 대졸자의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비중 증대 및 청년실업률 증가
 - 대졸자의 32.3%가 전공과 다른 직종에 취업하고 있으며,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표 1〉 학력별 전공·직업 일치도

구분	실업고졸			전문대졸			대졸		
	일치	보통	무관	일치	보통	무관	일치	보통	무관
1996	26.1	23.1	50.8	39.7	18.4	42.0	48.8	19.7	31.6
2000	17.4	25.9	56.6	35.8	21.5	42.7	45.3	21.6	33.0
2004	14.9	28.1	57.0	34.8	22.9	42.2	44.2	23.5	32.3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4)

- 대졸 청년층의 순조로운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
 - ※ 2006년 청년실업률은 7.9%(전체실업률 3.5%의 2배 상회)에 달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 쉬었음을 포함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19.5%로 조사됨.
-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막대한 재교육비용 발생
 - 대졸 신입사원의 1인당 평균 재교육비용은 6,218만 4천원, 평균 재교육 기간은 20.3개월
 -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연간 재교육 비용은 총 4조 8,595억원으로 상장사 연간 순익의 9.8%에 해당

〈표 2〉 대졸신입사원 1인당 평균교육비용 (단위 : 만원, 개월)

구 분	산 업		구 모		평 균
	제조업	비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총교육비용	5,433.2	7,500.0	10,679.9	3,919.4	6,218.4
연간비용	3,503.3	3,719.0	4,329.7	2,921.3	3,675.9
교육기간	18.6	24.2	29.6	16.1	20.3

자료: 한국경총, 대졸신입사원 재교육 현황조사(2005)

(2)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 현장의 수요와 괴리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으로 인해 입사 후 막대한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 발생, 이로 인해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 심화
 - 학교 교육이 산업계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치 못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공급 받은 인력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신규채용시 재교육기간 및 비용측면에서 비효율 유발
 - 이는 주요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채용패턴 변화를 리드
- 사회 및 기업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실시로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에 배출되고 있음.
 - 암기위주의 정형화된 교육으로 인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성 및 기획력

- 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건 부족
- 현장 중심, 사례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 대학의 고객인 기업의 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기술 및 경제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 부족
 - 이처럼 산업계와 괴리된 대학교육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노력을 참고할 필요
- 대졸 신입사원의 업무성취 만족도는 C학점(70~79점)으로 저조한 평가(경총, 「대졸신입사원 업무능력 평가조사」, 2007. 5. 6)
 - 대졸 신입사원의 업무성취 만족도 평가에서 전체기업의 48.5%가 70~79점으로 평가
 - 이는 산업계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교육 현실과 평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 정책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인력의 질적 저하 현상에 기인

2. 개선방안

(1)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개선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대학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필요하고 이를 교과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
 - 대학의 몸집불리기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백화점식 학과운영을 지양하고, 산업 현장에 적합한 학과운영

<참고자료>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
 - 작은 목표를 수립, 하나하나 이루어나감으로써 성공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긍정적 사고를 갖는 비결
- 창의적이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획능력
 - 창의력은 튼튼한 기초소양 위에 정보의 수집 및 활용능력, 그리고 열린 사고가 나타나되어 발현되는 것
- 원만한 대인관계와 원활한 의사소통
- 국제적인 감각과 외국어 구사능력
 - 국제화된 예절습득과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
- 철저한 자기관리
 - 매사에 성실하며 주어진 일은 반드시 매듭짓는 자기관리 능력
- 건전한 기업관
 -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며, 균형잡힌 노사관 견지

- 산학연계 강화를 통한 기업의 맞춤형 교육 방법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
 - 이를 위해 기업 및 대학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 대학평가시 산학협동 항목에 대한 가산점 부여, 해당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강화
- 지방의 전문대학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 의한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대학의 적극적인 교류 확대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학생의 직장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기업, 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함.
 - 정부는 기업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입장에서는 청년실업 문제 완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함께 우수 인력의 조기 발굴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

- 대학은 재학 중 직장경험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여건조성 노력 필요

(2) 규제개혁을 통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환경 조성

- 대학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함.
 - 대학설립, 정원정책관련 규제완화 및 입시정책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확보
- 대학의 자율화를 통해 책임경영체제 정착 및 자발적 시장내 경쟁을 유도하여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며, 이와 함께 경쟁에서 도태된 대학의 원활한 퇴출제도를 정비해야 함.
 - 대학간 통폐합 및 경영정보공시제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주도적 구조조정 시행
 -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함.

3. 직업교육중심대학 도입 관련

(1) 직업교육강화 방안으로서의 직업교육중심대학 도입은 바람직

-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경우, 전문대학과 대학간, 일반대학과 산업대학간 구분을 없애는 대신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
 - 계속교육을 원하는 교육 수요자와 고도 능력을 가진 인력양성을 위한 기업

들에게 만족스러운 교육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직업교육중심대학과 산업체의 연계 강화 및 다양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산업체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직업훈련 실시
 - 직업교육중심 대학에 산업체 주문식 교육의 우선 적용 및 지원 강화
 - 산업체 근로자의 계속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기업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2) 직업교육중심대학의 명칭 문제

- 직업교육중심대학이라는 명칭은 자칫 대학이 직업교육만을 담당하는 학원과 같은 인상을 줄 수도 있음.
- 따라서 좀 더 창의적이며 보편적인 명칭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함.
 -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인 Brain Korea 21(BK 21)에 대비되는 Technology Korea 21(TK 21) 추진 등

(3)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역할 강화

- 산업계의 수요를 직업교육중심대학에 전달하고 두 분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역할 강화
- 이미 구성된 각 분야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Sector Council)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이를 다른 분야에도 확대하여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긴급
 - 직업능력표준(NSS; National Skill Standards) 제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준을 개발하고 각 분야별 표준개발 및 직업훈련체계, 자격검정사업은 분야별·지역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
 - 직업능력표준 개발을 통해 일과 훈련, 자격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토록 해야 하며,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 제고

지 정 토 론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

양 한 주

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

지 정 토 론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

양 한 주

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회장

I. 왜 대학에서 직업교육이 중요한가?

1. 발제 내용

발제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대학에서 직업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M. Trow의 고등교육단계이행론에 의한 대학교육의 보편화단계(고등교육 취학률 50%이상)
 - 우리나라 고등교육 취학률 61.7%(‘04)
-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의 생존전략으로서 인력양성 수준 및 분야별 특화 필요
- 청년실업률, 대졸자의 공급과잉 심화, 학력수준별 불일치(하향취업)
- 대졸 인력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간의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
- 직업대학체제(school to work, work to school) 구축 필요

2. 토론자 의견

전반적으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으로 국제경영개발원(IMD) 발표 자료를 근거로 대학교육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6년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경쟁력은 다음과 같다.

국가경쟁력	고등교육 비중	대학교육 경쟁력 (대학교육의 기업요구 부합 정도)
38/61	4/61	50/61

출처 : IMD(2006),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61개국 중에서 국가경쟁력 38위, 고등교육 비중 4위에 비하여 대학교육의 기업요구 부합 정도가 50위라는 점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양적인 팽창으로 보편화단계(고등교육 비중 : 4위)에 이르고 있으나 교육과정 및 교육의 질적인 수준은 기업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7년도에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국가경쟁력 29/55위, 기술경쟁력 6/55위, 과학경쟁력 7/55위를 차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다른 평가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이 보편화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직업교육체제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II. 대학교육의 주체들이 보이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1. 발제 내용

발제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대학교육주체들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대학 : 산업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 산학연계형 교육과정의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대학생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필요
 -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대학 스스로 변화 노력 부족
- 기업 :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 저조
 - 인력양성의 공동 책임의식 미흡
 - 인력의 수요자만으로 인식하는 경향
- 정부 : 교육-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정보 인프라 부실 및 재정지원 미약
 - 대학에서 일의 세계로 이동하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업 역시 인재선발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
 - 학생 1인당 교육비는 7.089\$로 OECD 평균 11,254\$의 63%에 불과하고 부담주체도 국가부담은 24%에 불과하여 OECD 평균 74%의 1/3 수준에 불과

2. 토론자 의견

전반적으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으로 대학교육주체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학 :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미흡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전문대학은 1970년 23.1명에서 2005년 44.1명으로, 대학은 1970년 20.0명에서 2005년 25.7명으로 악화(OECD회원국의 평균(대학 및 전문대학 전체) : 2003년 14.9명)
 - ※ 출처 : 200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 기업 : 학벌위주 사회에서 능력위주 사회로의 변화 노력 미흡
 - 학벌위주의 급여체계 유지
- 정부 : 고등단계 직업교육체제 구축 노력 미흡
 - 수업연한 및 학위 기준 고등교육체제 유지

- 대학체제에 대한 교육목표, 역할과 기능 구분 모호

구분	대학	교육 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 대학	기술 대학	전문 대학	각종 학교	원격 대학	사내 대학
4년제	175	11	1	14	1	-	4	15	1
2-3년제	-	-	-	-	-	152	1	2	-

주 : 1) 2006년 기준임

출처 : 2006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Ⅲ. 정부는 대학의 직업교육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1. 발제 내용

발제자는 대학의 직업교육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산업계 수요를 대학교육에 반영하고 투자 확대 유도
 -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평가
 -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산업계의 대학에 대한 투자에 세제 혜택 확대
-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노력 지원
 - 전문대학에 학사과정 설치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확대 추진(2단계 균형발전대책의 일환)
 - 산학협력 활동 참여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학교기업의 금지업종 완화
 - 산업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 지원
 - 우수 강의내용 공개
- 대학-노동시장 간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보 확충 및 유통촉진

- 대학의 직업교육 성과 측정 공개
- 대학생 기초직업능력 평가제도 도입
- 국가직무능력표준(KSS) 개발
- 인력수급 전망의 신뢰성 제고
- 교육-노동시장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진로지도 강화

2. 토론자 의견

전반적으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대학의 직업교육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고등교육체제를 수업연한 및 학위 기준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 기준의 연구중심 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개편
 -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사항들은 모두 직업교육중심대학에 관련된 사항임
 -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4년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 각종 학교의 교육목표, 기능과 역할이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구분할 필요성도 없음
 - 수업연한 및 학위 기준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 기준의 고등교육체제 개편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임
-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
 - 중등교육단계부터 연구중심대학 또는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의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학제 개편이 필요함 : 적성과 능력에 따른 조기 진로선택 가능

IV. 토론주제 : 고등교육의 직업교육강화방안으로 직업교육중심대학 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한가?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

육중심대학”으로 구분하는 “**직업교육중심대학 시스템의 도입**”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이유와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민의 대부분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에 부응하여 대학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기능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교육 수요자(기업, 학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인적자원의 질적인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함

2.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체제로의 개편을 통하여 개방화시대에 교육분야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과 자격의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고 국가교육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함

○ 고등교육체제의 국제비교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독일	일본	한국
직업교육 중심대학	Community College (2년) ↓ 대학편입 (2년) ↑ 전공과정	New University (Polytechnic) (3-4년제)	IUT (2년) ↓ IUP (2년)	Polytechnic (3-4년제)	Fachhochschule (4년)	고등전문학교 (2년) ↓ 전공과 (2년) ↓ 과학기술대학 (학사 2년, 석사 2년)	전문대학 (2~3년) ↓ ?
	수여 학위	학사	학사	학사	학사	학사	전문학사 (준학사)

3. 평생교육시대에 부합하는 “**순환형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에서 일터로(school to work), 일터에서 학교로(work to school)**”의 이행이 원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사회의 급변, 직업주기의 단축 시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

4. 연구중심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과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합한

직업교육중심대학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연구중심과 직업교육중심으로 단순화 하여 대학을 특성화 하고 학습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대학의 선택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5. 직업교육 천시풍조 타파, 학벌위주에서 능력위주로의 사회분위기 변화, 직업분야에 따른 수업연한 다양화, 직업선택에 따른 대학선택 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여야 함

지 정 토 론

평생학습체제에서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김 성 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지 정 토 론

평생학습체제에서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

김 성 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평생학습체제에서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발표하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지희 연구위원께 감사하며 발표 내용 대부분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론의 속성을 살리기 위해 발표 자료를 축약하면서 찬론, 이론과 질문 등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저성장·저고용,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음”은 공감하나, “산업구조의 성숙으로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능력이 둔화되고, 세계화, 지식정보화 등에 대한 경제주체별 적응능력의 차이는 산업 및 기업 간의 양극화, 고용·소득 측면의 양극화로 연결되게 되었음”은 약간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 아울러, “고용유연화의 진전에 따라 평생직장 시대에서 평생직업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근로자’만이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음”은 최근,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이태백’으로 연결된 지난 10년을 되돌아 볼 때, 수궁하기 어려운 여지가 있다.

2. “평생학습 사회에서 교육의 축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이동”에서 “대학교육의 보편화가 화두가 되고, 대학진학율의 성장과 고학력화로 인해 신장된 학력은 오히려 평생학습의 시대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도 공감하기 어려운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아울러, 대학교육의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미국 주립대학 수준의 학과 전공(71/250), 교수와 교직원(3,300/30,000), 예산(4,571억/약23배) 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수:학생 비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세계적 명문대는 물론 미국의 평균적인 주립대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0명 내외인데 비해 우리나라 국립대는 평균 33명, 사립대는 42명이나 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학부제, 광역화, 대학원 중심대학, 삼불정책, BK, 법인화 등 어떤 화려한 정책도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3. “기술개발 주기의 단축, 높은 이직가능성으로 인해 재직자의 능력개발의 필요성 증대, 동시에 낮은 출생율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여성과 고령자에 대한 인력수요를 증가시켜 능력개발 수요의 증가가 야기”되어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요구가 특별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재직 근로자, 중고령자, 여성을 들 수 있”음도 공감하기 어려운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재직 근로자, 중고령자, 여성들의 현실적으로 절실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 평생학습 체제의 문제점으로 낮은 평생교육 참여율,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취약성 등을 들고, OECD가 제시한 평생학습의 주요 6대 정책 영역들 - 평생학습의 참여율, 평생학습 접근에 있어서의 계층 간 불평등, 평생학습의 재정, 평생학습의 정보 및 진로 제공, 활용 및 인증, 평생학습의 질 관리 및 전달체계-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6개 정책 영역 모두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한 시점”임과, “직업능력개발 관점의 미비”에 수궁하면서도, 평생학습 체제를 담당할 제도, 교육자와 기관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에 대한 견해는?

5. “평생학습 체제하의 직업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에서 “평생학습 과정에 직업교육 요소를 필수화(built-in)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와 노동시장간 이행경로

(transition pathways)의 개선"을 들고 "청년층 전체 인구의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과, "이 같은 대졸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크게는 학교에서 일터로 그리고 일터에서 학교로의 순환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 볼 수 있음에 수궁하면서도 공감하기 어려운 여지가 있다. IMF 이후 지난 10년간의 구조 조정에서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에 이은 '이태백'의 큰 흐름을 바꿀 정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경로(school-to-work)의 개선"과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경로(work-to-school)의 개선"을 위해 "기업의 능력개발 제도가 work-to-school을 지원할 수 있어야"하며, "또한 기업에서의 경력과 경험을 학교가 인정해 주는 제도가 필요"함에 수궁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나누기'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에 대한 견해는?

6. "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의 배경으로 "대학 설립 자유화와 함께 대학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학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적령기 인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대학은 교육대상 측면에서 평생교육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음에 이어, "성인들을 학생으로 수용해야 하는 문제와 동시에 재정 압박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비전통적인 학생을 모집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비전통적인 학생'(non-traditional students)에는 성인 근로자, 노인계층, 여성계층, 취약계층 등이 포함"됨에 수궁하면서도, 대학 교육의 3대 기능- 교육(teaching) 연구(research) 확장(extension)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풍토 조성 과 교수:학생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교육 행정 당국의 인식 전환과 실행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7.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에서 "고등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학교육이 상아탑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의 생존전략으로서 인력양성 수준, 대상 및 분야별 특성화가 필요"하며, "전문대학 미충원율('05)은 수도권 3.1%, 지방 26.2%이며, 대학 미충원율은('05) 8.9%여서 전국 대학을 특성에 따라 기능과 소재지별로 연구/교육/직업교육중심으로 구분 및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의 기능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 대두되고 있음"을 일부 수궁하면서도 공감하기 어려운

여지가 크다. 대학의 정원 개념, 미충원을 등을 따지기에 앞서, 6항에서 지적한대로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풍토 조성 과 교수 : 학생 비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 행정 당국의 인식 전환과 실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대한 견해는?

8.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서 “대학이 제공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선호는 매우 높으나 대학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평생학습의 제공은 매우 저조”하며 “대학이 평생학습시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데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지적되는 요소로서 대학 : 지역·산업의 현장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을 들고 있”음은 공감하기 어려운 여지가 크다. 대학 교육과정은 주기적으로 개편되고 있음에도 높은 교수 학생 비율, “이태백”의 좁은 취업문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 개선이 효력을 발휘할 여지가 희박한 현실이다.

9. “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는 개인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기능)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취업으로, 그리고 졸업 후 각 직업생활 단계에서 학교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각 수요 집단의 수요에 맞는 평생직업교육 제공이 기본 방향”이고, “직업생활단계에서 정규와 비정규 근로자, 전직 및 이직자, 창업자, 실업자, 고령자 및 퇴직자 등 취업상태, 연령 집단, 소외계층 등 평생직업교육의 대상 집단(target group)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필요”함에 수궁하면서도,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풍토 조성 과 교수 : 학생 비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 행정 당국의 인식 전환과 실행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공감하기 어려운 여지가 크다.

10.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된 “첫째, 생애단계별 근로자의 평생학습 요구 지원(재직자 및 근로자) 필요, 둘째, 취약계층 등 사회변화, 노동시장 변화, 양극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요구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강화, 셋째, 대학의 정규과정 및 비정규 과정에서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그리고 대학이 지닌 각종 시설과 제도를 활용한 개인의 평생학습 기회 지원 및 평생학습을 선도할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대학들은 현재의 학생 교육도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11.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기능 강화”에서 “대학의 정규 과정 내에서의 평생직업교육 강화는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 및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1) 산업체 근로자의 고등교육참여 및 학위취득 기회 확대, 2) 시간제 등록제도의 활성화, 3) 전문대학 졸업생의 학위취득기회 확대, 4) 대학 정규과정 내 성인학습과정의 설치” 등을 인정하면서도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풍토 조성 과 교수 : 학생 비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 행정 당국의 인식 전환과 실행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공감하기 어려운 여지가 크다.

12. “비정규 과정에서의 기능 강화”에서 “대학의 비정규 과정 내 평생직업교육 강화는 각 집단별로 자아실현과 직업능력개발기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전직자, 이직자 등 재직자와 비재직자를 위한 과정을 제공하되 대학의 지식기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학이 비교우위를 가진 과정 중심으로 제공, 1) 대상 집단(target group)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2) 전직자, 이직자, 실업자를 위한 향상훈련과 재훈련으로, 창업자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퇴직자(퇴직 공무원 포함)의 재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운영, 3) 고학력 중고령자를 위한 Career Path용 프로그램 운영(사회복지사, 노인건강 트레이너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문화 적응 교육 등”에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전제로 공감한다.

13. “대학의 정규 및 비정규 교육 과정에서의 기능 강화”에서 “대학의 정규, 비정규 과정에서의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는 개인의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재직자와 비재직자를 위해 각 집단별 특성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재직자를 위한 대학의 정규, 비정규 과정에서의 평생교육 제공의 초점은 고용가능성 향상과, 사회적 자본 형성 강화 지원에 두어져야 하며, 비재직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제공의 초점은 취업능력 개발지원과 함께 자아 실현 강화에 두어져야 할 것임을, 또한, 재직자를 위한 과정들과, 비재직자를 위한 과정의 제공은 지역산업체 및 지자체와의 협력과, 타부처와의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함” 등에도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전제로 공감한다.

14. “평생교육 지원체제 개선”에서 “평생 직업교육의 전반적인 체제 강화가 필요하고 평생교육의 측면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가) 평생학습 전달 기능의 강

화,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질관리 체계화, 평생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 지역사회와 연결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 나) 평생학습의 활용 및 인증, 다) 행정정책 지원책 강화” 등과 함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재정은 매우 취약”하고, “기업의 경우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며, “평생학습의 직업교육기능 강화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 부처 및 지자체의 필요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공감한다. 아울러,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가 밀박침”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의 범부처적 조정이 필요”에 공감하면서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공감하면서, 이러한 노력과 함께 대학 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풍토 조성 과 교수 : 학생 비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 행정 당국의 인식 전환부터 출발하여 “평생학습체제에서 직업교육”이 실현되기 바란다.